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etoday.co.kr

제3141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KB증권
BUY KOREA BUY BOND
채권 투자는 KB증권
*투자 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 *<자산가격변동>,<환율변동>,<신용등급하락>등에 따른 원금손실(일부 또는 전액)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발행사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 *AAA/AA·A·BBB 각 +,0,-순으로 투자적격등급 구분

코스피(22일) 2557.08(+19.29P) ▲ 코스닥 852.04(+10.32P) ▲
환율(달러당 원화) 1318.10(-8.60원) ▼ 금리(국고채 3년물) 3.321%(-0.019%P) ▼



기업 신용리스크 확대… '투자-고용-소비' 악순환 3



'김남국 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4

무역적자 벌써 300억弗 "8월께 흑자전환 가능성"

5월 1~20일 수출입 현황

반도체 -35%·對中 수출 -23%
주요 교역국 수출량 증가 전무

작년 전체 적자규모의 60% 넘어
15개월 연속 무역적자 가시화

한국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보인 가운데, 이달 역시 수출 감소의 늪을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35.5%의 감소세를 보였고 주력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역시 마이너스(-) 23.4%에 달했다. 무역적자도 계속되며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300억 달러에 육박,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의 60%를 훌쩍 넘었다. 다만 정부는 "8월엔 흑자전환이 가능하다"며 하반기 변곡점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4면

22일 관세청이 발표한 5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4억4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 감소했다. 다만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 15일보다 0.5일 적어 이를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22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2% 줄었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이 월간 기준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4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1년 전보다 35.5% 줄었다.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월간 기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석유제품(-33.0%), 정밀기기(-20.9%), 선박(-58.3%), 가전제품(-36.6%) 등 주요 품목 중 승용차(54.7%)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3.4% 감소했다. 대중 수출의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로 1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 확실시된다. 특히 미국(-2.0%), 유럽연합(-1.1%), 베트남(-15.7%), 일본(-13.9%) 등도 감소세를 보이며 주요 수출 대상국 중 수출이 늘어난 국가는 한 나라도 없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7억4700만 달러로 15.3% 감소했다.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43억4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41억9300만 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늘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4개월 이상 무역적자가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29개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62%에 달하는 액수다.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8월 수출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 차관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줄고 있다"며 "하반기엔 월별 흑자로 전환하는데 그 시기는 9월이 될 수도 있고 8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월 품목별, 지역별로 점검하고 있다. 하반기엔 확실히 (흑자로 전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연구원 제조업 업황 설문 PSI 발표를 했는데 두 달 연속 플러스가 나왔다"며 "4월에 본 5월, 5월에 본 6월 전망 등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고 그린·보건·디지털 등 핵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의존 줄이고 북핵 대응 강화… 외교 새판 짰다

尹 '외교 슈퍼위크' 성과
공급망 다변화 등 美중심 진영 결집
워싱턴 초청… 한미일 공조 재확인
우크라 재건 지원·EU 협력도 확대

17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숨 가쁜 '외교 슈퍼위크'가 마무리됐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북핵 대응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가 주요 성과다.

슈퍼위크의 시작은 17일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이었다.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은 물론 SMR(소형모듈원전)·천연가스·수소 등 청정에너지 협력을 논의했다. 또 미국 주도로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인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캐나다가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했다.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을 줄이는 한편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진영 결집에 윤 대통령이 역할을 하는 대목이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된 윤 대통령은 19~21일 호주·베트남·인도·영국·인도네시아 등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핵심광물을 비롯한 공급망 다변화를 도모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우방국들과의 우호 관계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다졌다.

G7에서는 미국·일본 정상과 만나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섰다. 북한 핵에 맞선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최근 뚜렷한 관계개선으로 미국과 함께 군사협력 중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G7을 계기로 삼자회동을 가졌다. 논의의 완성은 미국 워싱턴에서 세 정상이 다시 모여 앉을 때 이뤄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에 초청했고, 7월에는 한미일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문제에도 적극적인 역할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16일 특사 자격으로 방한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만난 지 닷새 만이다. 또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원전과 방위산업, 반도체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귀국 후에는 독일과 유럽연합(EU) 등 유럽과의 외교 성과도 도출해냈다. 윤 대통령은 21일 귀국하자마자 독일 정상으로서는 30년 만에 방한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맞이한 후 양자회담을 통해 전기차·배터리·차량용반도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2일에는 방한한 EU의 샤를 미셸 상임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협력을 그린·보건·디지털 등 3대 핵심 협력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4전5기'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간다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보증금 적용기준 4.5억→5억 확대
與野, 시급성 감안 합의… 소위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다섯 차례 논의된 끝에 22일 통과됐다. 여야는 그간 피해 지원 대상 확대 여부와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등 전세 보증금 지원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었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대안 합의에 이르렀다.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문턱을 넘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이견을 좁히기 어려웠던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선 정부가 제시한 대안인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방안을 담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에서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야당 측은 처음부터 보증금 채권매입 등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를 강하게 주장해왔지만, 정부·여당은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야당과 피해자 측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여당이 무이자 대출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법안에 담겼다. 정부의 경·공매 비용 부담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했다. 이 밖에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방안 등도 포함됐다.

여야가 합의에 어려움을 겪은 또 하나의 지점은 '피해 지원 대상 범위'였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 구제 범위를 사기성 깡통 전세까지 확대했고 대항력 없는 사기 피해자의 이중계약이나 신탁 사기 등도 점유가 돼 있으면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다"면서도 "5억 원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자, 1인 피해자, 점유되지 않은,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입주 전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특정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들도 대통령령에 따라 긴급 주거 지원, 대출, 법률 상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고 부연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주장한 채권 매입, 최우선 변제 소급 적용은 타인의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었고,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며 "여당의 입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적 자치에 완전히 반하거나 타인의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영인 기자 oin@

고금리 시대엔 '무이자'가 알짜…'틈새 영업' 나선 車업계

완성차 '금리 세일즈' 경쟁

현금 700만원 or 36개월 무이자
변동 금리부터 차값 할인까지
다양한 옵션으로 소비자 유혹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 및 금리 (단위: 연 %)

※ 출처: 여신금융협회 공시포털, 수입차(중고차 포함) 기준



카드 및 캐피털 (5월 9~11일 기준)

회사명	최저	최고	전분기 평균
신한카드	-	14.8	9.1
산은캐피탈	9.5	12.1	7.7
삼성카드	4.9	8.8	7.1
우리카드	4.1	11.1	7.1



수입차 파이낸셜 (3월 31일 기준)

회사명	최저	최고	전분기 평균
폭스바겐파이넨셜	-	8.9	7.5
토요타파이넨셜	-	11.8	5.8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넨셜	-	9.5	5.5
BMW파이넨셜	-	11.3	3.5
도이치파이넨셜	-	-	0.0

※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입차 할부금융사는 최저금리를 공시하지 않았다. 일부 비인기 차종을 중심으로 0%대 금리까지 제시하는 등 고금리 시대에 대응 중이다.

#수원 광교에 거주하는 A 씨는 이달 초 미니(MINI) 공식딜러사를 찾아 견적을 받았다. 재구매 여부와 특정 신용카드 보유 등에 따라 구매 혜택은 차고 넘쳤다.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할부금리. 세일즈 매니저는 파격적인 이율을 제시하며 할부를 권고했다. 고금리 시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연 0.99%였다.

#성남 분당에서 거주하는 B 씨는 일본차의 견적을 받고 깜짝 놀랐다. 가격은 3500만 원. 공식딜러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현금 700만 원 할인(36개월 할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시했다. 두 가지 모두 파격적이었다. '현금 700만 원 할인'에 화색이 돌았던 B 씨는 주저 없이 후자를 택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사실상 같은 조건이었다. 현금 700만 원을 할인받고, 이후 36개월 동안 내야 하는 이자까지 모두 따져보니 가격은 다시 3500만 원이 됐다.

올해 초 연 10%대에 달했던 자동차 할부금리가 5% 수준까지 하락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 유동성을 지닌 수입차 업계에서는 0%대 할부금리까지 등장했다.

22일 자동차 및 금융투자업계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할부금리가 뚜렷한 내림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 중이다.

먼저 5월 들어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보다 소폭 낮아졌다. 이자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때부터 나왔다.

올해 초 사정은 크게 달랐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카드 및 할부금융사의 자금줄도 경색됐다. 3%에 못 미쳤던 AA+ 3년물 여신채권 금리는 6.0%대까지 급등했다. 이 여파는 약 3개월 뒤인 올해 초 고스란히 할부금융 시장까지 퍼지면서 10%대 할부금리마저 등장했던 바 있다.

이후 채권시장이 안정되면서 3개월 만인 1분기 말, 금리 하단이 5%까지 내려갔다. 결국, 올 하반기에는 지난해 상반기 수준(2~3%)의 할부금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현대캐피탈은 이달부터 현대차 일부 인기 차종을 대상으로 '변동금리' 상품을 선보였다. 신차 출고 이후 일정 기간 '이자'만 내는 상품이다.

예컨대 현대차는 8세대 신형 그랜저를 출고한 뒤 1년 동안 할부금 대신 이자만 갚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1년 뒤부터 할부금을 내는 '복합금리 거치' 할부상품이다.

수입차 업계에선 아예 0%대 금리까지 등장했다. 이날 여신금융협회 공시포털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BMW파이낸셜은 평균 3.5%, 도이치파이낸셜은 0%대의 평균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A 씨 사례처럼 MINI 일부 차종은 0.99%의 할부금리로 팔리는 중이다. 1분기 평균, 토요타파이낸셜(5.8%)·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5.8%)도 주요 카드 및 할부금융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앞세우는 중이다.

이 밖에 일부 수입차 딜러는 무이자 할부까지 내세운다. 언뜻 고금리 시대에 무이자 할부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자체 할부금융사를 갖추면 가능한 일이다. 그 대신 파격적인 할인은 '전무(全無)'하다고 보면 된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수입차 업계가 낮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는 배경에는 그만큼 판매가격이 유동적이기 때문"이라며 "고금리 시대에서 0%대라는 파격적인 할부금리를 제시했다면 사실상 현금 할인을 없앤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전세대란 시절' 물량 쏟아진다… 하반기 '逆전세난' 먹구름

2년 전 '웃돈 계약' 세입자 계약 만료
전세가 반등 기대한 부동산 시장 찬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가 반등 조짐을 보이지만, 하반기에 역전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9.3%(4만1764건→3만7888건) 감소했다.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9.6%와 9.3%씩 줄어 1만757건과 4만5381건으로 줄었다.

매물이 줄자 전세 시장은 상승 전환하는 곳이 속속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15일 기준) 서울 송파와 강남구, 경기지역에선 과천과 성남, 용인, 광명, 화성 등이 전셋값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셋값 내림세가 둔화하고, 시중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승세도 멈추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일부 지역의 전세 시장 회복에도 하반기 역전세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21년 하반기 전국 집값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당시 전셋값도 덩달아 튀어 올라 최고점을 형성했다. 또 부동산 임대차 3법 시행을 본격화한 시점(역시 2021년 7월 이후로, 당시 계약한 전셋집의 계약 만료 시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돌아온다는 점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평균 전셋값' 통계를 보면 서울 평균은 2021년 6월 4억 9833만 원에서 같은 해 7월 6억1557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급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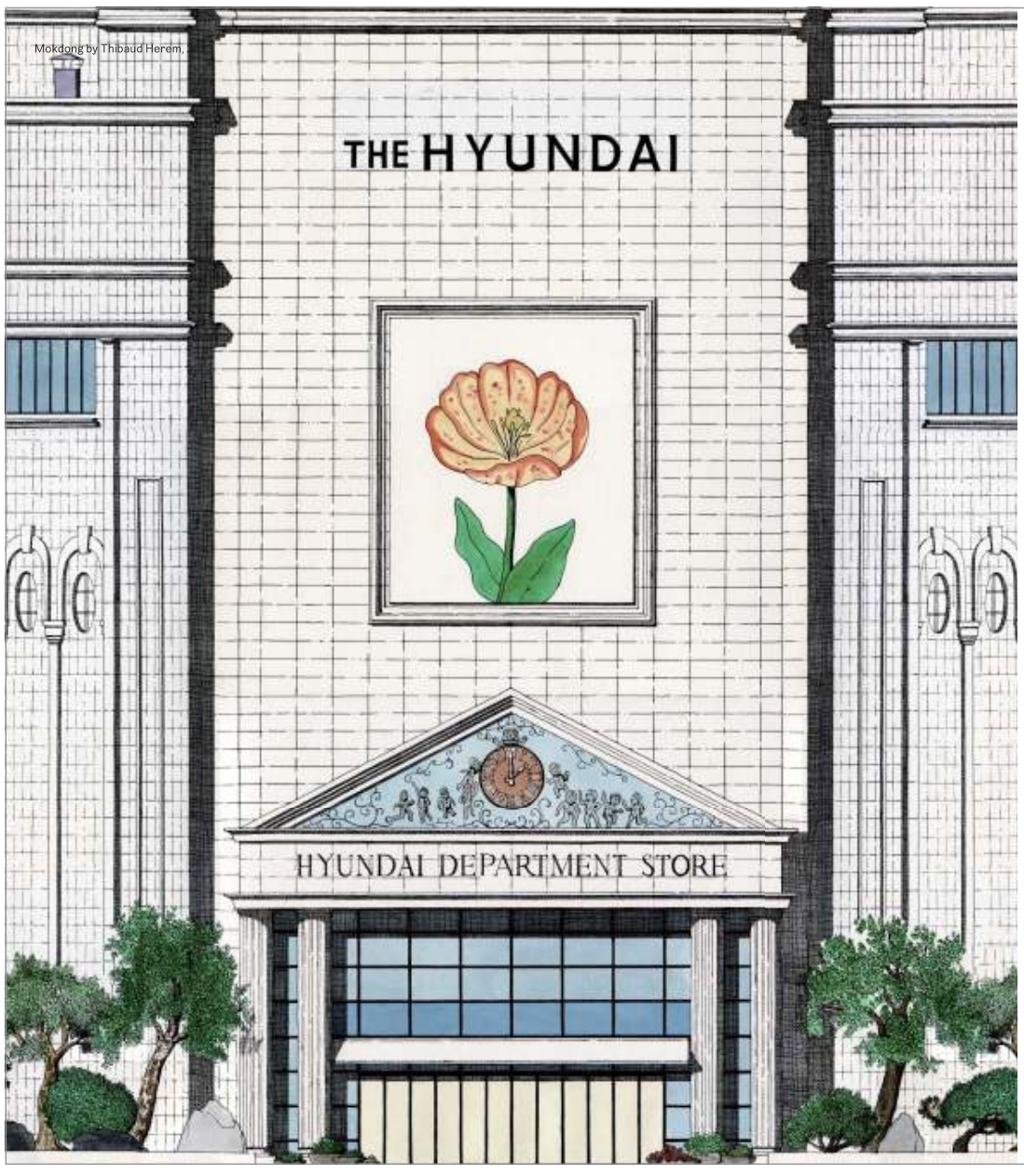
2021년 12월에는 6억3403만 원까지 오르는 등 전셋값 강세가 이어졌다. 당시 고점에 체결된 전세계약 만료 기간이 올 하반기에 몰리면서 최근 빠진 전세 가격으로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4월 26일)까지 집계한 올해 누적 수도권 전세 거래 중 2년 전 가격 대비 하락 거래 비중은 66%에 달한다.

수도권 지역별로는 인천이 70.5%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경기 66.0%, 서울 64.2% 등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2021년 전셋값 급등 당시 갭투자가 늘어난 것도 전세금 미반환 우려를 더한다. 갭투자 성격상 주택 구입 때 자기자본비율 낮은 만큼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더 불거질 수밖에 없다.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2021년 당시 비싸게 계약한 물건들은 역전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만 빌라와 오피스텔과 달리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낮고, 사기 위험도 적은 만큼 역전세 문제가 전체 시장으로 번지기보다는 일부 물건에 한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THE HYUNDAI

런던에서 서울까지,
0.1mm의 선으로 포착한 건축과 자연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드라마 <그 해 우리는> 속 일러스트의 주인공이기도 한 티보 에렘.

유럽 유명 건축물부터 서울의 거리, 꽃과 나무까지
종이 위에 0.1mm 굵기의 펜으로 그려내는 아날로그 드로잉의 매력을
목동점 글라스하우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Thibaud Hérem 티보의 그림정원

2023. 4. 28(금) - 5. 28(일)
목동점 글라스하우스 본관 7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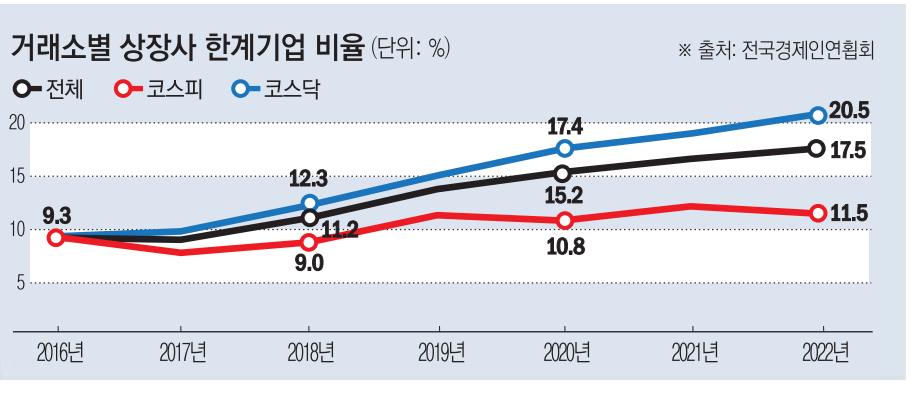
자세히 보기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면세점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H몰 | 현대그린푸드 | 한섬 | 더한섬닷컴 | 현대리바트 | 현대L&C | 지누스 | 현대렌탈케어 | 현대드림투어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실적악화에 신용리스크↑… '투자→고용→소비위축' 惡순환

올 경제 0%대 성장 가능성에 심란
코스피 상장사 1분기 영업익 53%↓
작년 기준 상장사 17.5% 한계기업
낙인효과에 주식 좀비시장 전락 우려





마이너스(-) 1조984억 원. LG디스플레이의 1분기 영업 성적표다. 대규모 영업손실을 낸 LG디스플레이는 투자적격 등급에서 벗어난 '추락 천사'(신용등급 A+→A) 신세가 됐다. 한국기업평가는 "단기간 안에 유의미한 영업 현금 창출력 회복도 쉽지 않다. 당분간 과중한 재무 부담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기업들의 얼굴엔 주름이 한가득하다. 올해 우리 경제가 제로 퍼센트(0%)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서다. 코스피 상장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반 토막 났다. 50% 넘게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악화한 실적은 기업 신용등급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 신용등급이 나빠지면 기업들은 웃돈(고금리)을 주고 돈을 빌려야 한다.

기업들만의 문제로 끝이 아니다. 신용리스크가 현실화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 기업 투자는 줄 수밖에 없다. 이는 고용 감소, 소비 위축, 실적 악화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 나라 경제까지 흔들 수 있다.

◇실적악화·부채급증…신용강등 너머 '좀비기업' 양산 우려 = IT 부품공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요즘 거래은행 기업대출 담당자를 쫓아다니는 게 일상이 됐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수출물량이 줄어 매출이 반 토막이 난 상황에서 시장금리까지 치솟자 거래은행의 독촉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A 씨는 "회사채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손사래를 치고 있고, 은행들은 빚 상환을 독촉하는 상황이다. 이러다 파산하는 것은 아닐까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낸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1분기 결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622곳의 영업이익은 25조1657억 원(연결 기준)으로 1년 전보다 52.75% 감소했다. 3월 말 부채비율도 114.85%로 늘었다. 지난해 말보다 2.20%포인트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나빠진 실적이 기업 신용을 자극할까 우려한다. 이경화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글로벌 수요 둔화, 금리 인상 및 유동성 위험, 부동산 경기 하강 및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 가능성, 인플레이션과 고환율 등 기업을 둘러싼 위험 요인이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신용도가 부정적인 방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악의 경우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의 17.5%가 한계기업이었다. 상장사 중 한계기업의 비중은 2018년 11.2%, 2019년 13.7%, 2020년 15.2%, 2021년 16.5% 등으로 증가했다.

◇신용등급발 나쁜 고리, 금융·경제 시스템 흔들 수도 = "최근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되면서 비교적 안전한 채권으로만 몰리는 반면, 등급 하락 우려가 있는 채권에는 매도 호가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같은 A등급 우량채권이라도 신용등급이 조정될 거란 소문이 돌면 투자자들 간 유통 시장에선 찬밥 신세다."

신용등급 하락은 기업들을 유동성 위기로 내몰 수 있다. '신용등급 하락→자금 조달 어려움(고금리·투자자 외면)→투자 위축→실적 악화→신용등급 추가 하락'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은행이나 사채로 버틸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돈을 준다고 해도 기관들이 회사채를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SK이노베이션(AA), 포스코퓨처엠(AA-) 등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흥행몰이하는 등 회사채 시장에 점차 온기가 돌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투자심리는 여전히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A등급 회사채 미매각률은 26.7%, BBB+등급 이하는 37.9%로 나타났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부진과 실적 저하 우려로 비우량 등급인 A등급 회사채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돼 비우량 크레딧 전체가 약세를 보이기보다는 펀더멘털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제 펀더멘털 약화와 함께 시장에 찍힌 '낙인 효과'는 글로벌 자금의 이탈을 부추기고, 주식시장을 '좀비시장'으로 전락시킨다. 하이투자증권은 우리 경제가 에너지 의존도·반도체 수출 의존도·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란 낙인 효과가 실물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어닝쇼크에 체력 떨어진 기업들 '도미노 신용 강등' 공포 그림자

추락천사 전락위기 기업 늘어나
한기평 실적발표 기간 8곳 하향

잿빛 경기전망 속에 '어닝쇼크'가 현실화하면서 재계에 '도미노 신용 강등'이라는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기업은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투자나 인수합병(M&A)은 물론 실적까지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금융권의 뇌관으로 불리는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부실 우려도 한층 커졌다.

22일 본지 취재결과, 국내 신용평가 3사(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신용평가에서 올해 신용등급·등급전망(Rating Outlook)·등급감사(Watchlist)가 상향된 곳은 41곳이다. 하향된 곳은 21곳이다. 지난해 말 상향 55건, 하향 45건보다 개선된 수치다. 신용등급이 올랐거나. 오를 가능성이 있는 기업 비율이 더 늘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1분기 기업실적이나 재무상태 반영 전의 얘기다. 12월 결산법인 유가증권 상장기업 622곳의 1분기 영업이익은 25조1657억 원(연결 기준)으로 1년 전보다 52.75% 감소했다. 법인세 비용 등을 뺀 순이익은 18조84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68% 줄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감소 폭은 1분기 기준으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114.85%로 지난해 말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신용등급 하향의 문턱에 선 기업들도 늘었다. 올해 들어 한기평의 등급전망 분포를 보면 부정적 전망 부여 업체는 9곳으로 긍정(8곳)을 앞선다. 추락천사(신용등급 하락)로 전락 위기에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다.

걱정은 점차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한기평은 1분기 실적발표 기간(4월 이후) 8곳의 등급과 전망을 하향했다. LG디스플레이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A(긍정적)'으로 하향했다. 대상·현대비엔지스틸·동국산업·휴비스·푸본현대생명보험·SK증권·바로저축은행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다.

박준홍 S&P 이사(한국기업 신용평가팀)는 'S&P 글로벌 신용평가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운 대외환경이 향후 1~2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높은 곳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 등)을 꼽았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NH Card
함께하는 100년 농협



zgm. 고향으로 체크카드 주요 서비스

전국 오프라인 가맹점 이용 시
최대 0.6% NH포인트 적립

구분	평일(월~금)	주말(토,일)
기본 서비스	국내/해외 0.2%	국내 0.4%, 해외 0.2%
우대 서비스	-	전국 오프라인 가맹점 이용 시 0.6%

고향사랑 기본 서비스
고향사랑 기본 서비스는 카드를 발급 받은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국내/해외 이용가맹점 0.2% NH포인트 기본적립
※ 전월실적 조건 및 적립한도는 없습니다.
※ 해외이용 시 국제브랜드수수료 및 해외서비스수수료가 별도로 포함되어 청구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외이용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말(토·일요일) 국내 이용가맹점 0.2% NH포인트 추가적립
※ 전월실적 20만원 이상 시 제공되며 적립한도는 없습니다.
※ 카드사용 등록 일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는 전월실적 미달 시에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고향사랑 우대 서비스
고향사랑 우대서비스는 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 중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기부)한 고객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주말(토·일요일) 전국 오프라인 가맹점 이용 시 0.2% NH포인트 추가적립
※ 전월실적 20만원 이상 시 제공되며, 월 통합 적립한도 3천포인트입니다.

연회비 : zgm.고향으로 체크카드 [없음]

NH농협카드
card.nonghyup.com
카드고객행복센터 1644-4000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2174호 (2024.02.29)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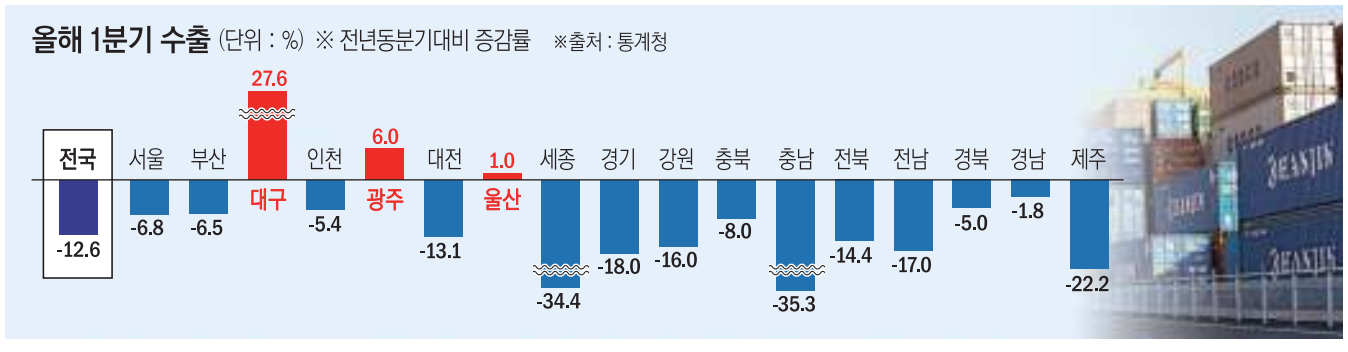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 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 (2개월).,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적용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대구·광주·울산〉

짠내 나는 K수출…'車·이차전지' 덕에 '대·광·울' 증가

통계청, 1분기 지역경제동향

메모리 반도체 등 수출부진 여파
17개 시도 중 14곳이 마이너스
광공업생산 전년동기比 9.7%↓
물가 상승률 1년 만에 5% 하회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 광주, 울산 등 3개 지역만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승용·화물차, 이차전지 등 자동차 관련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이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국 17개 시도 수출(통관기준)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6% 줄었다. 메모리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프로세서· 컨트롤러 등의 수출이 줄어든 것이 전체 수출을 끌어내렸다.

17개 시도 가운데 14개 지역에서 수출이 줄었다. 특히 충남(-35.3%)과 세종(-34.4%), 제주(-22.2%) 수출이 전년대비 20% 이상 급감했는데 메모리 반도체, 인쇄회로,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부품 등의 수출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대구(+27.6%), 광주(+6.0%), 울산(+1.0%) 등 3개 지역의 수출은 늘었다. 수출이 27% 넘게 늘어난 대구는 이차전지 원료인 리튬 등의 기타 유기·무기화합물과 기타 일반기계류, 화물차 수출 호조가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2018년 대구 지역에 전기 화물차 생산 공장이 들어선 바 있다. 광주는 승용차, 고무타이어·튜브, 화물차 수출 호조가, 울산은 승용차, 기타 석유제품, 경유 수출 호조가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전반적으로 이들 지역은 자동차 관련 수출 증가로 수혜를 입고 있는 셈이다. 반도체 등의 수출 부진 여파로 17개 시도 광공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했다.

강원(+8.6%), 대구(+4.7%), 인천(4.1%), 광주(+2.6%), 경남(+2.7%) 등 5개 지역에서 전기·가스업, 기타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

반면 경기(-23.4%), 서울(-15.3%), 충북(-11.4%)은 반도체·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12개 시도의 광공업생산이 감소했다. 서비스업생산(+6.3%)은 모든 지역에서 늘었으며 서울(10.1%), 인천(10.0%)에서 증가 폭이 컸다. 소비(소매판매, -0.3%)는 경북(9.2%), 대전(7.5%) 등 13개 지역에서 증가하고 제주(-5.8%), 인천(-4.7%) 등 4개 지역에서 줄었다.

17개 시도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했다. 작년 4분기(5.3%)와 비교해 0.6%포인트(p) 하락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2년 1분기(3.8%) 이후 1년 만이다. 시도별로는 강원(5.2%), 광주(5.0%), 충북(5.0%)이 개인서비스, 외식, 전기·가스·수도 등이 올라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세종(4.4%), 대전(4.5%), 경남(4.5%) 지역의 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걸면 걸리는 '점포 폐쇄 규제' 당국, 기준없이 "내실화" 강조

금융위 '銀 점포 속도조절' 압박
5대은행 지난달에만 31곳 문닫아
ATM·우체국 제휴 '급한 불 끄기'
은행 "거리·수단 기준 모호" 답답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시행한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의 기준이 애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폐쇄 대체 수단의 기준이 불명확해 은행들의 점포 철수에 명분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은행연합회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문을 닫은 점포 수는 31개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이 24곳으로 제일 많았고 신한은행이 6곳, 농협은행이 1곳이었다.

문제는 점포 폐쇄 후 '대체 수단 마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사전영향평가 내실화 방안 발표를 통해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다만, 당국은 5월 1일 이전에 점포 철수가 결정되거나 폐쇄되는 경우에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대체점포 마련, 사후평가 실시 등 '내실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4월 중 문을 닫은 지점에 대해 대체 점포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폐쇄한 점포 24곳 중 21곳에 대해 '동일 생활권 내 자행점포'를 지점 폐쇄 근거로 내세웠다.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우체국 창구 업무 제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대안으로 마련했다.

동일 생활권 내 자행점포란, 이번에 개정된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에 포함돼 있는 대체 수단으로, 금융위가 인정한 대안 중 하나다. 문제는 동일 생활권이라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은행연합회는 공동절차에 동일 생활권의 예시로 '통학구역' 등을 추가했다. 특정 초·중·고등학교에 가도록 지정해 둔 구역을 기준으로 점포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당 지점이 있는 지역에 맞게 은행 자율로 동일 생활권을 정의하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은행은 '동일 생활권'을 넓게 보고 싶겠지만, 고령자 입장에서는 당장 내 집에서 500미터 앞 점포가 사라지면 대단히 불편하다고 느낄 것"이라며 "소비자 불편, 금융 접근성 보장을 기준으로 '생활권'을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수단이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신한은행은 폐쇄한 점포 1곳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ATM을 마련했다. 그러나 4월 금융위는 ATM이 은행의 창구업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어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수단으로는 앞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점포 폐쇄를 통해 고정비용을 절감해왔다. 온라인 금융거래 수요가 늘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포 수가 증가하면서다. 하반기 금융당국이 추가 자본 적립의무 도입에 나설 예정인 만큼 은행권은 수익성이 없는 점포 폐쇄를 통한 비용 절감이 절실한 상황이다. 즉, 금융당국의 속도 조절 압박에도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별 소비자보호 전담부서가 점포 폐쇄 이후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사후평가'는 1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재 은행별로 절차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유하영 기자 haha@

檢 'KDFS 채용' 황욱정 대표 자녀 사무실 압색

'KT 일감몰아주기' 개입 정황

검찰이 KT와 임직원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황욱정 KDFS 대표 자녀들의 별도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KDFS에 직원으로 채용된 황 대표 자녀들의 별도 사무실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지만, 향후 수사에서 일감몰아주기 관련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검찰은 이날 KT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계속 이어갔다. 이는 16일 발부된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이다.

앞서 검찰은 16일 압수수색 당시 KT와 KT텔레캅 본사, 신현옥 KT 부사장과 황욱정 KDFS 대표(당시 KT 상무)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구현모 전 대표가 KT 대표였던 시절, 시설관리 계열사인 KT텔레캅이 KT그룹의 시설관리 일감을 하청업체인 KDFS에 몰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남중수 전 KT 대표에게까지 뻗어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남 전 대표는 구 전 대표와 황 대표와 매운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abc123@
김이현 기자 spes@

'김남국 방지법' 소위 통과… 25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의원 가상자산 투명화 법안
정개특위 '국회법 개정안' 통과
"소유 코인 6월 말까지 신고해야"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도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포함해 의정 활동에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을 단돈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전부 신고해야 한다. 현역인 21대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개특위 소속인 김성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3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병합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도출된 조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경우 소유 금액 전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정했다. 현재 주식이나 현금 등의 재산 등록기준이 10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6호의2를 신설하고, 그 안에 국회의원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때 발행인 명단도 함께 등록해야 하며, 정확한 비율과 금액 기준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전재수 의원은 "부동산, 주식은 1000만 원 이상만 등록하게끔 되어 있지만,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1원이라도 취득하면 전부 신고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22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부칙에 특례 규정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후 윤리심사자문위는 신고된 사항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뒤, 그 의견을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최형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김남국 코인 의혹과 관련) 국회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또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석연치 않은 배경이 있는지 등 지금부턴 일체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은 진보시키고 혁신가들과 선량한 투자자들은 보호해가면서,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 이들의 노력을 착취하거나 가로채려는 일체의 시도는 확실히 막아나가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조정안을 의결한 후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정안은 정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흔들리는 與野 리더십… 고개드는 '신 스틸러'들

'코인악재' 민주당 지지율 4.6%p↓
국민 42% "당 지도부가 사퇴해야"
'이재명 대안' 17%가 이낙연 꼽아

국민의힘 지지율도 '제자리걸음'
내부에선 "김기현 존재감 약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판론 '솔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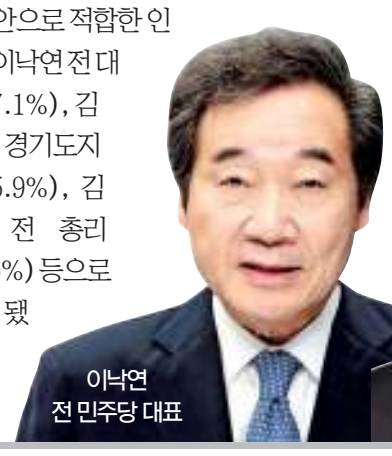
여야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정치권을 향한 시선은 장외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토 정서가 커지고 있다. 반사이익을 취할 국민의힘도 존재감이 떨어지면서 리더십 부재 상황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4명을 상대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42.4%, 국민의힘은 38.5%로 집계됐다. 직전 주 조사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은 4.6%포인트 감소했다. (자세한 사항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김 의원에 대한 코인 논란이 지지율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야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공개적 비토 발언이 커지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폭력으로 당의 언로를 막는 행위는 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이원욱 의원도 "이재명 대표님, 이걸 보시고도 강성 팬덤과 단절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냐"고 일갈했다. 이 대표를 따르는 강성 지지자들을 비판하면서 '지도부 책임론'을 꺼내 든 것이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차기 총선 불출마를 종용하는 듯한 이야기도 돌았다.

시선은 장외에 있는 야권 대안 세력으로 쏠리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다. 그는 신냉전 시대와 대외전략 구상을 담은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 (21세기북스) 책을 출간했다. 유학 생활에 대한 소회를 담은 책으로 22일 기준 교보문고가 집계가 5월 둘째 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4위에 올랐다.

6월 이 전 대표가 귀국하면 이 대표에 대한 대내외적 압박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쇄신 방안으로 응답자의 42.3%가 '당 지도부 사퇴'라고 답했다. 이 대표의 대안 세력도 공공연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표의 대안으로 적합한 인물로 이낙연 전 대표(17.1%), 김동연 경기도지사(15.9%), 김부겸 전 총리(12.5%) 등으로 집계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 성격상 스스로 물러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김남국 사태가 커지면서 공천에서 손 떼는 등 스스로 쇄신 방안을 발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도 장외로 눈이 쏠리는 건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악재로 반사이익을 누릴 법도 하지만, 생각만큼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존재감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큰 어젠다를 던져서 이슈가 먹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여권의 시선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로 향하고 있다.

한 장관은 3·8 전당대회 때부터 등판론이 제기됐다. 그만큼 정치권의 이목을 한 번에 사로잡을 인물로, 최근에는 그를 풍자한 패러디 만화까지 만들어져 화제를 낳았다. 지난 17일 취임 1주년을 맞은 한 장관은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저를 비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며 1년간 소회를 밝혔다. 당일 법무부 청사 현관에는 한 장관의 취임 1주년을 축하하는 꽃바구니로 가득하였다. 그 가운데는 '21대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적힌 꽃바구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한동훈 차출론'에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관이면 벌써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장관에겐 정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를 하거나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박민식 "전관예우, 송구스럽게 생각"
총선 출마 질문엔 "생각해본 적 없어"

초대 보훈부 장관 후보 청문회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렸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와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 총선 출마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가보훈처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질과 도덕성 등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보훈처는 2월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월 5일부터 부로 승격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승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9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와 관련한 야당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06년 검사를 사직한 후보자가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어서 국회의원 출마까지 1년 4개월의 짧은 기간에 50억 원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수임하고 관련 소득세 7억4000만 원을 납부했다"며 "엄청난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2008년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재산) 신고 내역을 보니까 25억8000만 원이다. (검사 사직하고) 만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재산이 늘었다"면서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에 서초동에 개업하셨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엔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같은 지적에 박 후보자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 지적이 저는 맞다고 본다.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니까 고작 6개월간 초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훈처가 보훈부로 막 승격이 되는 마당에서 제 부족한 것을 100%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이라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후보자는 불출마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정대한 기자 vishalist@



“부처 칸막이 허물어 ‘키다리 아저씨’ 환경 조성해야”

뿌리없는 청춘 – 자립준비청년 지원 효과 높이려면

7월쯤 장벽 해소 방안 마련

전담 인력 충원이 핵심 과제로

정책 外 사회적 분위기도 중요

지난해 8월 보육원에서 자립하거나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달아 벌어졌다. 금전적 어려움에 심리적 불안감이 더해져 그 무게를 견디기 쉽지 않았으리라. 윤석열 대통령은 “부모 세대로서 부끄럽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우리 미래를 위한 의무이자 배려”라며 더 과감한 지원과 기회의 평등 보장을 약속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연간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양육시설에 머무는 ‘보호연장아동’에 대해서도 일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올해 서울·대전·경기·제주는 1500만 원을, 13개 시도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은 무게감 있게 추진됐지만, 여전히 전담 인력이 부족해 그로 인한 정서적 자립,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 배치된 인력은 103명으로, 1인당 담당 청년은 100명이 넘는다. 올해 180명까지 늘린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해도 1인당 담당 청년은 70명에 달한다. 선진국이 30명 가량을 담당하는 것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보다 내실 있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은경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전 분야 자립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자립지원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집단 프로그램 방식의 자립 교육으로 일상생활 기술이나 직업, 진로 탐색 등 자립역량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지원 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인 정순돌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부처별로 업무와 법률이 나뉘어 있어 지원에 차이가 생기고 사각지대도 발생했다”라며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일원화해 자립준비청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실례로 복지부에 있는 ‘바람개비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심리·정서적 지원 차원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데 인력 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지원 방안들이 부처가 어디가 됐든 이제는 공통적으로 지원돼야 될 정책으로 언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 칸막이를 해소하는 데 특위가 조정의 역할을 하면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7월 정도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후견인이나 멘토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들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강조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전기·가스 요금 상승률 ‘외환위기 이후 최고’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135.49(2020년=100)로 작년 동기보다 30.5%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분기(41.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서 연료비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입주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역감염병, 11개→20여개로 확대

큐코드도 항만까지 적용하기로

검역감염병이 현행 11개에서 단계적으로 20여 개까지 늘어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은 항만까지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이달 15일 검역전문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중장기 목표는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 구현이다. 4대 추진전략과 15개 세부전략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참여·소통에 기반을 둔 ‘넥스트 팬데믹(대유행)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발생현황과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역감염병을 현행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 등 11개에서 단계적으로 뎅기열, 홍역 등을 포함한 20여 개까지 확대한다. 또 2025년까지 온라인 해외감염병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현행 오프라인 신고센터를 개선해 접근성을 높인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큐코드(Q-CODE)는 항만까지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은 효과성을 평가해 내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운송수단·화물검역을 통한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사회를 지원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 부속서를 반영해 항공기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를 고도화하고, 기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한다. 또 오염이 발생한 운송수단 소독기준·절차를 정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화물검역 요건·절차를 진단·정비하고, 화물 내 인체위해요인에 관한 평가기법 연구를 진행한다. 이 밖에 검역관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을 정례화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외질병의 유입·확산 차단을 통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해나가기 위한 정책을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中 황사 유입 증가… 더 짙어진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결과

대기 정체·국외 유입 증가 주원인

하반기 계절관리제 개선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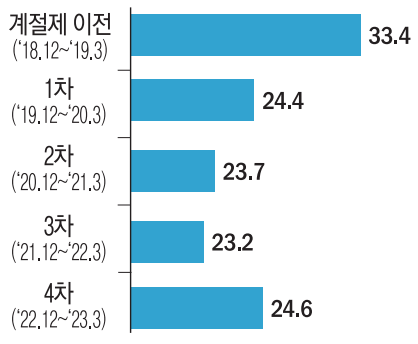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했음에도 이 기간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6.0% 짙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좋음’ 일수는 31일에 그쳐 3차 계절관리제보다 9일이나 줄었다. 정부는 대기 정체 일수가 늘고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환경부는 22일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의 종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6㎍/㎥로 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평균 농도 23.2㎍/㎥보다 1.4㎍/㎥ 높았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6㎍/㎥ 이상인 ‘나쁨’ 일수는 4차 계절관리 기간 20일로 3차 때보다 이틀 늘었다. 평균 농도가 15㎍/㎥ 이하인 ‘좋음’ 일수 역시 31일에 그쳐 3차 때와 비교해 9일 줄었다. 정부는 대기질 악화 원인에 대해 불리한 기상 여건과 국외 유입 증가 등을 꼽았다.

전국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단위 : ㎍/㎥) ※ 황사 제외

※ 계절관리기간(12월~3월) ※출처 : 환경부



4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 정체 일수는 71일로 3차 대비 4일 늘었다. 풍속이 2.5㎳ 이상인 ‘고풍속일’ 일수는 18일로 3차 대비 14일 줄고, 풍속이 1.2㎳ 이하인 ‘저풍속일’ 일수 역시 11일을 기록, 3차 17일과 비교해 6일 감소했다.

기상 영향에 따른 초미세먼지 증가 효과는 0.4㎍/㎥로 나타났다. 또 중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아지는 등 나라 밖 사정도 변화해 1.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차 계절관리제 기간 46㎍/㎥로 3차 때(43㎍/㎥)보다 3㎍/㎥ 높았다. 특히 베이징, 톈진, 허베이 등 한국에 영향을 많이 주는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3차 60㎍/㎥에서 65㎍/㎥로 짙어졌다. 분위 평원 역시 69㎍/㎥에서 75㎍/㎥로 6㎍/㎥ 증가했다.

다만, 5등급 차 운행 제한 등 국내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1.4㎍/㎥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정부 정책 효과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감축량은 3차 계절관리제 당시 11만7410톤에서 이번에 11만9894톤으로 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를 토대로 국내 저감 대책 효율화,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의 관심과 협조로 계절관리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늘었다”라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북유럽 3개국과 원전·바이오 협력 강화

정부, 기관·기업 경제사절단 파견

정부가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북유럽 3개국과 원자력발전소,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대진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코트라(KOTRA),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구원(KCL), SK, 한국수력원자력, 셀트리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등 기관·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경제사절단을 이 3개 나라에 파견한다. 우선 정 차관보가 22일 에스토니아에서 산드라 사라브 경제통신부 차관을 면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리투아니아 총리실 선임 부실장, 핀란드 경제고용부 차관보, 핀란드 외교부 차관보 등을 차례로 만난다.

이들과의 면담을 통해 △교역·투자 확대 △이차전지·바이오·원전 등 산업 협력 △유럽연합(EU) 통상현안 협력 △디지털·첨단기술 협력 등 양자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또 경제사절단은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양국에서 각각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열고, 코트라는 방문 기간 에스토니아 기업청과 상호 투자 진출 협력 양자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 경협 강화를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절단 방문 기간 핀란드에서는 유럽 내 전기차용 배터리 시험 평가를 위한 KCL 핀란드 지사 개소식이 열린다. 산업부는 “향후 현지에서 국내 완성차와 이차전지 업계를 지원하고 이차전지 시험평가 분야에서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창립 55주년

동서식품

한 잔의 커피로
행복한 내일을 만듭니다

진심을 담은 향기로
따뜻한 위로가 되었던
커피 한 잔

행복한 내일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순간이 행복해지도록

Maxim
커피라는 행복



커지는 美 디폴트 경고음… 투자자, 신흥시장으로 피난

옐런 "내달 1일 데드라인 직면"
골드만삭스 "내달 8일 잔고 최소"

투자자 61% "신흥국 비중 확대
선진국보다 밸류에이션 매력적"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이 큰 미국이 아닌 그간 저평가된 신흥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회에 보낸 마지막 서한에서 6월 초 청구서 지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상황을 계속 검토하겠지만 평가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내달 1일이 조정 불가능한 데드라인"이라고 말했다.

내달 15일 전에 디폴트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옐런 장관은 "정확한 'X데이트(연방정부의 현금이 바닥나는 시점)'는 불확실성이 있다"면서도 "15일까지 정부가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즉 그날까지 세수가 모인다 해도 빚을 갚을 정도로 충분치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옐런은 그간 이달 말까지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골드만삭스도 19일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내달 1~2일까지 수입 속도가 예상보다 더 둔화하면서 재무부의 현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며 "8~9일께 재무부의 현금 잔고가 최소 보유 기준인 300억 달러(약 40조 원)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연방정부 부채가 한도인 31억4000달러에 도달하면서 순차입금을 늘릴 수 없게 됐다. 이에 연방 지급금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조치로 예산을 끌어다 쓰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미국 재무부 현금 잔고는 570억 달러 정도다.

골드만삭스는 "마감 시한 전에 합의를 기대하지만, 그 과정에는 좀 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고 시장에서는 부채 한도가 결국 상향되기 전에 추가적인 리스크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부채한도 협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22일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양측이 여전히 합의 불발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 디폴트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에 지친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마켓라이브펄스가 애널리스트와 트레이더 등 전문가들을 상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향후 12개월 동안 신흥시장 자산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49% 가까이가 미국 경기침체로 신흥시장의 가치가 감소하더라도 근본적인 성장과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선진국보다 매력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저스틴 레버렌즈 인베스코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개발도상국 경제는 지난 10년 새 회복력이 개선된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그간 철저히 무시돼 왔다"고 말했다. 즉 저평가된 부분이 있어 상승 여력이 크다는 이야기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그리스 총선, 여당 압승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승리한 뒤 연설하고 있다. 중도 우파 성향의 여당인 신민주주의당은 이날 총선에서 40% 이상을 득표해 최대 야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과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는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과반 확보에는 실패해 연정을 구성하거나 7월 초 2차 총선을 치르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아테네/로이터연합뉴스

美마이크론 때린 中… 삼성·SK '기대반 우려반'

中당국 "보안 위험" 구매중단 지시
한국산 대체 가능성… 美반발 우려
"中, 美대화 재개 주도권 확보 포석"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 중 처음으로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구매 중단을 지시하면서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의 반도체 전쟁도 본격화했다. 한국 기업들은 마이크론 대체자로서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미국의 견제에 자칫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커졌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웹사이트에 성명을 내고 "며칠 전 법률에 따라 중국에서 판매되는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심사를 했다"며 "검토 결과 마이크론 제품은 중국의 정보 인프라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CAC는 "이로 인해 당국은 마이크론 제품이 보안 심사를 통과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규정에 따라 중국의 주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미국이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기로 하고 일본과 네덜란드 등 반도체 동맹국에 동참을 요구한 데 따른 중국의 반격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마이크론의 중국 고객사들이 미국산 반도체를 자국산이나 한국산으로 대체하려 하는 만큼 이번 결정은 중국 공급망을 통해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를 거론하며 "이들은 마이크론의 경쟁자로, 이미 중국과 상당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에서 중국과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하는 마이크론으로선 대체자들이 시장에 남아 있다는 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경쟁사에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게 마이크론이 중국의 명확한 첫 타깃이 된 이유"라며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을 공급망에서 제거하려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삼성과 SK가 역풍을 맞을 위험도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중국에서의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이 마이크론 판매를 금지하면 판매 확대를 자제해 달라"고 한국 기업들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이 조처하기 전 미리 우리 기업들에 반사이익을 경고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기에 앞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 행동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대영 기자 kodae0@

코인·드론… '은둔의 왕국' 부탄, 新산업 시동

'은둔의 왕국'으로 불려온 부탄이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비트코인 채굴에서 드론 기술에 이르기까지 신산업에 베팅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부탄 국부펀드인 드루크 홀딩&인베스트먼츠(DHI)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업체 중 하나인 싱가포르 비트디어와 손잡고 가상자산(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가상자산 채굴 자금으로 최대 5억 달러(약 6595억 원)를 책정했고 투자 유치를 위해 이달 로드쇼에 나설 계획이다.

부탄은 국가 주요 산업인 수력발전과 관련해 풍부한 원천을 갖고 있다. DHI와 비트디어는 수력발전이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쉽고 재생 가능한 전력원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해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어필한다는 방침이다. 비트디어는 100메가와트(MW) 규모의 가상자산 채굴 데이터 센터 건설도 계획 중이다.

우즈왈 딥 다할 DHI 최고경영자(CEO)는 "채굴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안전한 분야"라며 "우린 위험성이 가장 낮은 채굴 사업 위주로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DHI는 신산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기술 추진은 농업 경제의 혁신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탄은 1980년대 이후 연평균 7.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인 국가다. 다만 국가 주요 사업이 관광과 수력발전에 집중돼 있고 인도와의 교역 의존이 크다는 지적도 받는다.

DHI는 드론을 사용해 국가 전력 인프라를 검사하고 유지 관리하는 프로젝트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해엔 일본 드론 업체인 소라(Sora)와 기술 개발과 현지 생산을 협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검은석유' 캐던 엑손모빌… '하얀석유'도 캔다

美아칸소주 남부 리튬 시추권 매입
전기차 5000만대 규모 전력 공급량

미국 최대 석유회사 엑손모빌이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인 리튬 시추를 모색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엑손모빌이 최근 미국 아칸소주의 광대한 토지에 대한 시추권을 매입하고, 이곳에서 리튬 채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엑손모빌은 자원탐사업체 갈바닉에너지로부터 아칸소주 남부 스맥오버 지층의 약 486㎢ 토지 시추권을 1억 달러(약 1317억 원)에 매입했다. 해당 토지에는 약 400만 톤의 탄산리튬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기차 5000만 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엑손모빌은 향후 수개월 내에 이곳에서 시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수익성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금물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과정은 석유·가스 회사들이 오랫동안 길러온 전문 기술로, 리튬 생산에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리튬 채굴권 매입은 '석유 공룡'인 엑손모빌로서 규모가 큰 거래는 아니다. 하지만 엑손모빌이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 소식통은 "100년 이상 엑손모빌을 뒷받침했던 화석연료 사업과는 거리가 먼 거래로, 내연기관 엔진 수요가 조만간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엑손모빌은 지난해 내연기관 차량 수요가 2025년 정점을 찍고,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가 2050년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까지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 전세계 전기차 수가 2017년 300만 대에서 2040년 4억2000만대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엑손모빌은 2027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는 데 17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투자 계획의 일부로 리튬 생산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전기차 시대에 꼭 필요한 광물로 꼽히고 있다. 리튬은 배터리 생산 원가의 40%를 차지하며, 배터리 용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짓는다. 이에 따라 리튬의 몸값이 오르면서 기업은 물론 국가들도 '리튬 확보전'에 뛰어들고 있다. 중국은 현재 압도적인 점유율로 리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탄산리튬 가격이 위안화로 표시될 정도다.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도 리튬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나서고 있다.

변효선 기자 hsbyun@

3분기 반도체 반등론…'차세대 D램' 게임체인저 기대

메모리 반도체 업황 전망

삼성전자 감산에 반짝상승 후 DDR4 현물가격 줄곧 하향세

차세대 DDR5 가격은 5.7%↑ 내년 D램 시장점유율 역전 전망

업계 양산 속도…선점경쟁 치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3분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가격 지표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삼성전자의 인위적 감산 발표 이후 반짝 상승했던 D램 가격은 최근까지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재고 감소와 함께 D램 등 메모리 가격의 뚜렷한 변화가 생기면 업황 반전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며 "제품 가격이 유의미하게 상승한 단계는 아니지만 고객사들이 재고 조정에 들어가는 등 차세대 메모리를 중심으로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3.235달러로 1년 1개월 만에 소폭 올랐던 'DDR4 16기가비트(Gb) 2600' D램의 현물 가격은 계속 떨어지다가 이날 기준 2.985달러를 기록했다. 주로 PC에 쓰이는 'DDR4 8Gb 3200'의 평균 가격도 지난달 말 1.601달러까지 오른 후 현재 1.514달러로 낮아졌다.

현물가격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당일 이뤄진 가격을 표시하기 때문에 업황을 대변할 수 없지만 반도체 매매 심리를 즉각 반영한다는 점에서 고정거래가격의 선행지표로 보기도 한다.

다만 업계는 차세대 D램 가격 상승세에 주목하고 있다.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레거시(범용) 제품과 달리 DDR5 16GB 제품의 현물 가격은 지난달 3.921달러에서 이달 11일 기준 4.144달러로 5.7%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D램 시장에서 DDR5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올해 12%까지 4배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DDR4(23%)의 시장점유율을 넘어서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업체들은 DDR5가 고부가 제품인 만큼 차세대 시장 선점과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12나노급(㎚·1나노=10억 분의 1m) 공정의 DDR5를 최근 경쟁사들보다 먼저 양산을 시작했다. AMD와 호환성 검증까지 마쳐 신뢰성을 입증했다. 12나노급 공정은 최선단 기술을 적용해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생산성이 약 20% 향상됐고 소비 전력은 약 23% 개선됐다. DDR5 규격의 12나노급 D램은 최고 동작 속도 7.2Gbps(초당 10억 비트 전송)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조만간 10나노급 5세대(1b) 미세공정 기반의 DDR5 양산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현재 DDR5 수요는 서버용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인텔이 출시한 차세대 서버 CPU인 사파이어래피즈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소프트웨어중심자동차〉

SDV 향한 현대차… '마이 제네시스' 앱 출시

5개 앱 통합해 기능 편의성 높여

2025년 전차종 SDV 전환 목표

통합 결제시스템… 신수익 기대

현대자동차그룹이 소프트웨어중심자동차(SDV)로의 전환을 앞두고 차량 관련 소프트웨어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차는 22일 제네시스의 통합 고객 서비스 앱 '마이 제네시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앱은 △(구)마이 제네시스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제네시스카페이 △제네시스 빌트인 캠 등 5개 앱으로 분리되어 있던 기능을 통합해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던 기능이 앱 하나로 통합되며 차량 관리, 차량 제어,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제네시스 고객들의 편리한 디지털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5개 앱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한 마이 제네시스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22일 제네시스 통합 고객 서비스 앱 'MY GENESIS(마이 제네시스)'를 출시했다. 사진제공 제네시스

현대차그룹이 제네시스의 통합 앱을 출시한 것은 장기적으로 SDV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풀이된다. 주행은 물론 차량 유지·편의 기능·안전 기능 등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SDV에서는 운전자가 손쉽게 차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간편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올해 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연구개발을 비롯한 회사 전반의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SDV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이를 위해 최근 현대차그룹은 SDV로의 전환을 앞두고 차량 내 소프트웨어 이용 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2월 '현대 페이', 4월에는 '제네시스 페이'의 상표권을 출원하며 차량 내 결제(인카페이먼트) 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기아도 다음 달 출시를 EV9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능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FoD)와 무선(OTA) 업데이트 등 SDV 관련 기능을 선보인다. 간편 결제 시스템과 결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SDV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재 기자 2mj@



김영락(오른쪽)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부사장)과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가 22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미세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여 해양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LG전자-한국물포럼 '해양 생태계 보호' 맞손

미세플라스틱 저감 실천 MOU

LG전자가 한국물포럼과 미세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여 해양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해법 마련에 나섰다.

LG전자는 사단법인 한국물포럼과 22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전자와 한국물포럼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고객 참여 프로세스와 환경 관련 연구개발 협업체계 등을 구축한다. 또 한국물포럼 주관 행사와 제작 콘텐츠에서 LG전자가 개발한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를 소개한다.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는 세탁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탁 과정에서 옷감의 마찰로 생기는 미세플라스틱을 최대 70% 감소시키는 기능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전 세계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35% 정도를 차지한다.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는 세탁 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여 해양생태계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LG전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를 알리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내달부터 '미세플라스틱 케어 챌린지'를 진행한다.

챌린지 기간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를 사용한 횟수를 기준으로 경품을 제공한다.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LG 씽큐' 앱 리워드 동일 금액을 한국물포럼에 전달해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다솜 기자 citizen@

전동화 모델 공략하는 렉서스, RZ·RX 사전계약

내달 21일 공식 출시

렉서스코리아가 렉서스 최초의 전기차(BEV) 전용 모델 'RZ'와 5세대 'RX'의 사전 계약을 22일부터 시작했다. 두 차량은 다음 달 21일 공식 출시된다.

렉서스가 선보이는 'RZ 450e'는 브랜드 최초 전기차 전용 플랫폼 'e-TNGA'를 적용했다.

외관을 살펴보면 새로운 디자인 정체성인 렉서스 '스핀들 보디'를 바탕으로 역동적이면서도 공기역학적인 실루엣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RZ 450e에는 71.4㎾h의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가 탑재되며 프런트와 리어에 새로 개발된 이액슬(eAxle)이 적용된 다이렉트4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됐다. 수프림과 럭셔리 총 2개의 트림으로 출시되며, 픽업과 차량 유지 관리 서비스 등이 포함된 '오토 케어 리스'로만 판매된다.

RZ 450e와 함께 출시되는 'RX'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으로 시장을 공략한다.



RZ 450e



RX 450h+

RX 모델은 하이브리드 모델인 'RX 350h', 렉서스의 두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RX 450h+', 렉서스 최초의 2.4리터 터보 엔진 하이브리드 모델인 'RX 500h F 스포츠 퍼포먼스' 등 총 3가지다. 이민재 기자 2mj@

CJ대한통운, 부산에 두번째 스타벅스 물류센터

국내 최대 커피 전용 물류센터

CJ대한통운이 경기 이천에 이어 부산에 두 번째 스타벅스 물류센터를 운영, 남부권 배송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스타벅스 남부권물류센터' 가동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남부권센터는 축구장 6개와 맞먹는 3만 8000㎡ 규모로 커피 전용 물류센터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하루에 출고하는 물량만 13만개에 달한다. 이천 물류센터는 수도권 지역, 남부권센터는 경상도·전라도 지역을 맡아 배송 효율을 높일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원두가 들어온 순간부터 보관과 포장, 배송까지 모든 과정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남부권센터 자체를 '거대한 냉장고'로 지었다. 콜드체인 차량으로 매장까지 배송한다.

CJ대한통운은 피킹(상품 담기) 속도를 높이는 데 공을 들였다. 남부권센터에는 상온과 냉장, 냉동 등 온도별로 수만 개 상품을 보관한다. 이 때문에 주문에서 출고까지 걸리는 시간의 70% 정도가 피킹 작업에 소요된다.

CJ대한통운은 적재된 박스를 들어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는 '로봇팔 디팔레타이저', 매장별 상품을 자동 분류해 주는 'PAS(Piece Assorting System)' 등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中企 '위험성 평가' 개선 긍정적… 실효성 더 높여야"

고용부, 고시 개정 시행

근로자, 평가 전 과정 참여 명시
누가 참여할지 구체적 방안 필요
현장 안전 중요성 알리는 계기
지침 개정으로 산업재해 줄 것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개정

- 재해가 일어나는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반드시 수치화해 계산하는 '추정' 단계 삭제
- 최초 평가를 사업개시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없애고 '상시평가' 도입
- 근로자 참여 확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긍정평가

사업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현장 근로자인 만큼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이들이 참여하면 안전 관리 효율성이 올라갈 것

부정평가

추정 단계를 삭제하면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되지 않아 규제를 푸는 꼴이 될 것

고용노동부가 중소규모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시행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추정 과정 삭제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고시 개정이 현장에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지침은 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수치화해 계산하는 '추정' 단계를 없앴다. 중소기업에서 이를 시행하기에는 추가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근로자 참여도 확대했다. 그동안 위험성 평가 중 근로자 참여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서 가능했지만 사업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현장 근로자라는 인식 아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시 개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정 단계가 사라져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심적 부담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 역시 안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50인 규모의 특수포장재 생산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3년째 매해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도 매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리자는 세세한 공정은 모르기 때문에 개정 지침에 따라 모든 평가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면 실효성도 높아지고 안전 의식도 생겨서 좀 더 나은 작업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얼마만큼 지킬 수 있는가가 위험성 평가의 핵심"이라며 "근로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항목화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위험성 평가를 잘 몰라서 부담을 느끼고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평가 과정을 단순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침 개정으로 산업재해가 많이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전체 평가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효성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는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본인 공장에 너무 익숙해져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며 "개정 고시는 현장 작업자가 위험성 평가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뭉뚱그렸는데 누가 선정해서 어떤 사람을 참여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정 단계가 사라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준원 숭실대학교 교수는 "위험성 추정을 안 하면 위험성의 크기가 결정이 안 된다"며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 요인이 높은 순서대로 개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점에서 개정 고시는 아쉽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추정 과정을 뺀 개정 고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한정해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규제가 완화된 만큼 중소기업이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예지 기자 sunrise@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해외서 열풍
예스24, 내달 앨범판매…"실적만회"

신곡 '큐피드' 해외서 인기몰이
빌보드 '핫100' 17위까지 올라

예스24가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 뉴진스를 제치고 블랙핑크 마저 잡으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국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리뉴얼 앨범으로 실적 개선을 꾀한다. 피프티피프티의 해외 인기가 국내로 확산하면 상당한 판매 수익을 올릴 전망이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예스24는 다음 달 2일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미국 빌보드 진입 기념 리뉴얼 앨범을 판매한다.

피프티피프티는 최근 미국과 남미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중소 연예기획사 어트랙트가 내놓은 신생 걸그룹이다.

피프티피프티의 신곡 '큐피드(Cupid)'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스포티파이에서 월간 청취자 수 3430만 명(19일 기준)을 넘었다.

하이브, JYP는 물론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 세운 3412만 명 기록도 넘긴 K팝 걸그룹 최고 기록이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도 17위까지 올라 8주 연속 진입에 성공했다. 이 역시 2020년 블랙핑크가 세운 K팝 걸그룹 최장 기록과 동률이다.

예스24는 피프티피프티의 새 앨범이 국내 신드롬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분기 매출은 정체했고, 이익 감소는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연결기준 1분기 매출액은 1801억 원으로 전년 동기(1814억 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23억 원으로 지난해 62억 원에서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예스24 관계자는 "도서의 경우 판매가격은 정해져 있어 마진율이 낮은 책이 많이 팔리면 수익률 하락하는 구조"라며 "원가가 높은 도서 판매량이 많았던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

예스24는 앱 다운로드 이용자 및 신규 모바일 구매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푸쉬 알림을 활용해 더 세분화된 타깃에 대해 적절한 혜택을 제공해 예스24의 모바일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은 △2020년 101억 원 △2021년 125억 원 △157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알에프세미, 40억규모 LFP셀 공급계약 체결

알에프세미가 신규로 진출한 이차전지 사업 분야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알에프세미는 미얀마 24시 마이닝회사(24 Hour Mining & Industry)와 40억 원 규모의 리튬인산철배터리(LFP) 셀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05년 설립된 이 회사는 24시 그룹 계열사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미얀마 국적 항공사 두곳(MAI, Air KBZ)을 보유하고 있으며, 팜유 농장(Atro Agro), 전력사업, 관광사업(Tour 24), 석유사업(24 Petroleum), 광산사업 등을 통해 지난해 약 2억1400만 달러(28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팜유를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는 24시 그룹이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알에프세미의 배터리를 구매했다"며 "이번 계약은 초도물량 개념이며, 추후 대규모 LFP셀 공급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AI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수익 연구비 선순환 효과… '블록버스터' 된 국산 신약

HK이노엔 위질환신약 '케이캡' 1분기 처방실적 357억 성공모델
대웅제약 '펙수클루' 100억 돌파
보령 '카나브 패밀리'도 실적 견인

주요 국산 신약 매출 (단위: 억원)

제품명	개발사	적응증	2023년 1분기	2022년	허가일
펙수클루★	대웅제약	위식도역류질환	108	129	2021년 12월
렉라자☆	유한양행	비소세포폐암	-	329	2021년 1월
케이캡	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242	905	2018년 7월
슈가논	동아에스티	혈당 강하	57	240	2015년 10월
듀비에	종근당	당뇨	41	194	2013년 7월
제미글로(패밀리)★	LG화학	당뇨	350	1330	2012년 6월
카나브(패밀리)	보령	고혈압	330	1345	2010년 9월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처방액 기준 ☆ 내부 기준, 1분기 집계 중



국내 제약업계 기술력의 상징인 국산 신약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개발사의 든든한 캐시카우로 자리 잡으면서 수익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신약 연구·개발(R&D)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산 신약들이 블록버스터 약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개발된 신약들이 빠른 속도로 몸집을 키우고 있어 눈길을 끈다.

HK이노엔이 개발한 '케이캡'은 지난해 매출 905억 원, 올해 1분기 매출 242억 원을 올렸다. 처방실적 기준으로는 각각 1321억 원, 357억 원을 기록해 1000억 원대 블록버스터의 지위를 다졌다.

2018년 7월 국산 30호 신약으로 허가받은 케이캡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란 새로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대안을 제시했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야간 위산과다분비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등 뚜렷한 차별점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다.

국산 34호 신약인 대웅제약의 '펙수클루' 역시 P-CAB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분기 처방실적 100억 원을 돌파하며 케이캡의 뒤를 쫓고 있다. 지난해 7월 출시된 펙수클루는 첫 분기 46억 원, 4분기 83억 원, 올해 1분기 108억 원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펙수클루를 케이캡처럼 연매출 1000억 원대 품목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유한양행의 '렉라자'는 글로벌 블록버스터의 잠재력을 가진 신약으로 평가받는다. 2021년 1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렉라자는 지난해 32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유한양행은 올해 3월 렉라자에 1차 치료제 적응증을 추가하는 품목허가 변경을 신청해, 하반기 중 승인이 예상된다. 1차 치료제로 처방이 확대되면 국산 항암 신약 최초로 연매출 1000억 원 고지를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얀센의 병용 임상도 순항 중이다.

허가된 지 10년이 넘은 만성질환 신약들은 제품군(패밀리)을 형성해 개발사의 외형과 수익성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다.

보령의 간판 제품인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 패밀리'는 올해 1분기 3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출시 10주년인 2021년 연매출 1000억 원을 최초 돌파했고, 2022년에는 연매출 1300억 원을 넘겨 5개년도 연평균 성장률 23.2%를 실현한 제약업계의 대표적인 효자 제품군이다. 이런 카나브의 활약에 힘입어 보령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2분기 연속 매출 2000억 원을 돌파했다.

LG화학의 당뇨 치료제 '제미글로 패밀리'는 올해 1분기 350억 원의 처방실적을 달성했다. 2019년 1000억 원을 넘어선 후 4년 연속 1000억 원대를 유지 중이다. 제미글로는 2012년 6월 허가받은 국산 19호 신약으로, LG화학 생명과학부문 매출 확대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다.

2015년 허가받은 국산 26호 신약 '슈가논'은 지난해 240억 원, 올해 1분기 57억 원을 매출을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올해 '슈가다파정'의 품목허가 획득으로 슈가논 기반 복합제를 추가해 당뇨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국산 20호 신약인 종근당의 당뇨 치료제 '듀비에'는 지난해 19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종근당은 듀비에에 '자누비아'를 결합한 2제 복합제 '듀비에에스정'을 출시한 데 이어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3제 복합제 '듀비메트에스서방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혜은 기자 euna@

"선진국, 재무제표보다 미래가치 중요시… 해외 상장 도전해 보세요"

인터뷰 자명 블루애플자산운용 대표

독자기술·연구소·생산시설 갖춘
한바이오 캐나다 시장 상장 추진
"자율성 높은 해외로 시선 돌려야"

"한국은 재무제표상에 보이는 가치를 기준으로 상장을 평가하지만, 선진국은 사업 모델의 가능성, 미래를 보고 상장 가치를 매깁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선진국 시장에서 상장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본지와 만난 자명 블루애플자산운용사 대표 겸 투자총책임자(CIO)는 해외 주식시장으로 바로 상장하는 것이 회사 미래를 볼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블루애플자산운용은 글로벌 기업공개(IPO) 컨설팅과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컨설팅 회사다. 국내 바이오기업 현지 상장에 관심을 두고 있고, 첫 발을 내디뎠다.

자명 대표는 "국내 바이오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시장 상장으로 성장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성공률이 낮아 지속 경영도 힘들다"며 "바이오산업 특성상 주주나 창업자가 계속 자금을 수혈해야 유지된다. 한국 시장에서 눈을 돌려 해외 시장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블루애플자산운용은 올해 2월부터 국내 한바이오의 캐나다 주식시장(TSXV)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한바이오는 세포전문 바이오기업으로 자연살해(NK) 면역세포, 줄기세포, 모유두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후보물질을 이용해 화장품, 헤어케어 제품과 기능성 음료 등을 개발하고 있고 일부는 유통 중이다. 연구개발 담당 연구소와 제품 생산을 위한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생산시설, 마케팅 조직도 갖췄다.



사진제공 블루애플자산운용

자명 대표는 "한바이오는 창업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자체후보물질을 생산라인과 연계해 매출도 기록 중이다. 이러한 점을 높게 보고 있다. 미래 먹거리로 좋은 아이템이 될 것"이라며 한바이오의 탈모치료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해외 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명 대표는 "제도에 의해 기업을 평가해 상장을 주도하다보니, 20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음에도 금융만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최근엔 캐나다 주식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는 "주주와 경영진을 동시에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갖춘 캐나다로 많이 몰리고 있다.

캐나다 주식시장에서 몸집을 불려서 나스닥 상장을 노리는 전략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스위스, 이스라엘 등 금융경험이 많은 국가의 기업들은 캐나다를 교두보로 도전 중이다. 국내 기업들도 도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해외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경영진의 사고방식'을 꼽았다.

자명 대표는 "세계로 나가겠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금융환경에서 선진국에 도전한다는 부담감은 당연하다. 제도나 시스템이 다른 부분은 컨설팅 전문업체 등과 협업하면 풀어나갈 수 있다. 기업 활동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동아에스티 "글로벌 신약으로 리딩 컴퍼니 도약"

박재홍 사장 영입 후 R&D 강화
ETC 성장 위한 제품 개발·도입

동아에스티는 글로벌 신약을 발판으로 리딩 컴퍼니 달성을 목표로 연구개발(R&D)에 집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중개연구 전문가로 혁신 신약 개발을 이끌었던 박재홍 사장을 영입하면서 R&D 부문 신성장동력 발굴과 중장기 R&D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단기적으로 전문의약품(ETC) 사업 성장을 위한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종양과 면역·퇴행성 질환 신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동아에스티는 현재 신약 개발에 투입될 예산 마련을 위해 내분비·당뇨, 소화기, 근골격계를 중심으로 ETC 제품 개발과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캐시카우를 확보해 신약 개발에 투자하고 라이센스 아웃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중장기 신약 개발과 관련, 종양 및 면역·퇴행성 질환을 타깃으로 연구 개발에 집중한다. 2021년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단백질 분해 플랫폼 기술인 프로탁(PROTAC) 기술이 적용된 항암제 물질을 이전받고 표적항암제 후보물질을 개발 중이다. 또 카나프테라퓨틱스로부터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기술을 도입해 면역항암제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바이오 분야 연구도 활발하다. 회사는 차기 성장동력이 될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DMB-3115의 글로벌 임상 3상을 끝마치고 상업화를 준비 중이다. 'DMB-3115'의 글로벌 상업화를 위해 2021년 7월 다국적 제약사 인타스와 DMB-3115의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계약을 체결했다. 인타스는 올해 상반기 미국과 유럽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글로벌 R&D 전진기지 구축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12월 자회사로 미국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를 편입하며 글로벌 R&D 기지를 마련했다. 뉴로보 파마슈티컬스의 장점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벤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아에스티 파이프라인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를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SC'로 중남미 공략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 안착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중남미 최대 제약시장 브라질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성분명 인플릭시맙, 피하주사제형)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램시마SC도 '램시마'와 '트룩시마' 등 기존 제품들과 함께 직접판매(직판)할 계획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현지 법인 소속 커머셜 인력을 30여 명까지 확충하는 등 직판 역량을 강화했다. 회사 측은 출시 초기부터 정부, 의사, 환우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 대상 맞춤형 마케팅 활동으로 시장 안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에 셀트리온헬스케어 브라질 법인은 지난 18일 상파울루에서 염증성장질환(IBD) 분야 석학 등 100여 명의 인사를 초청해 치료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램시마SC의 리얼월드 데이터(Real-world Data) 및 유럽 처방 확대 현황을 소개하는 램시마SC 출시 행사를 열었다.



1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염증성장질환(IBD) 분야 석학 및 주요 인사 대상 램시마SC 론칭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 셀트리온헬스케어

유혜은 기자 euna@

"가상자산" G7 정상회의 성명문에 이름 올렸다

'Crypto-asset'으로 처음 명시
북한 해킹 등 공동대응 인식
표준규제 마련 작업 강력 지지
한주 전 열린 재정장관 회의서도
"표준규제 프레임워크 제정 노력"



2023 글로벌 가상자산 공동 규제 논의 타임라인

2월 23일	IMF, 가상자산 취급에 대한 공동 행동 계획 발표
2월 24일	FATF 가상자산 자금세탁 권고안 이행 제고 위한 로드맵 승인
2월 25일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 가상자산 규제 논의
5월 13일	G7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 DeFi, P2P, 트래블 룰 논의
5월 20일	G7 정상회의 "가상자산 정책 심의 이어나갈 것"

일본 히로시마에 모인 G7 정상들이 가상자산 시장 감시와 각국의 서로 다른 제도로 발생하는 규제 차익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G7 정상회의 성명문에 가상자산이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G7 정상들은 20일 발표한 성명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금융 부문의 발전을 면밀히 감시하고 준비할 것"이라면서 "금융안정위원회와 비은행 금융중개업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표준 규제 마련 작업 강력히 지지한다"고 합의했다. 이어 "우리는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고 규제 차익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불 효율성 및 금융 혁신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암호자산에 대한 정책 심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가상자산이 주요 의제는 아니었지만, G7 정상회의 성명문에 'Crypto-asset'(암호자산)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상회의보다 일주일 앞서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탈중앙화 금융(DeFi) 등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13일 발표된 재무장관 회의 성명문은 FSB(금융안정위원회)와 IMF가 정한 가상자산 권고 규범을 따르고, 표준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명시했다. 개발도상국의 CBDC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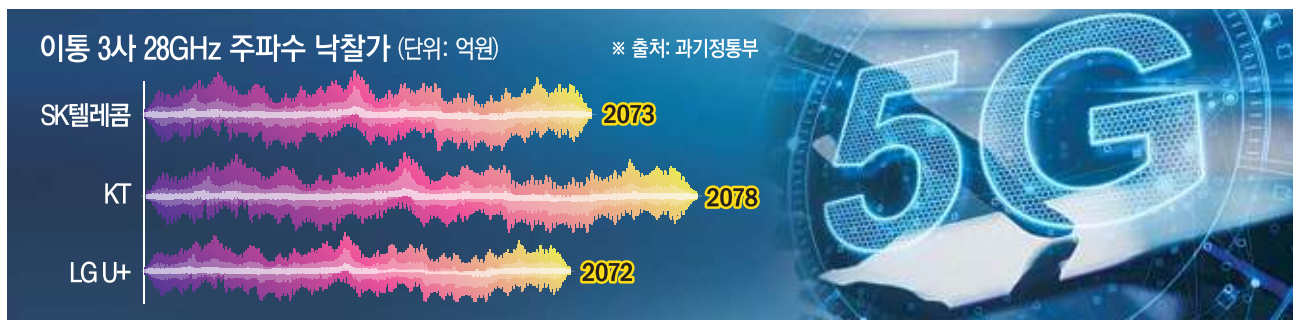
성명문은 "특정 국가 세력에 의한 가상자산 탈취, 랜섬웨어 공격, 테러 자금, 제재 회피 등 불법 행위 및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탈중앙화 금융(DeFi) 및 가상자산 중개자에 대한 FSB를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의 후속 작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래블룰을 포함해 Defi, 개인간(P2P) 거래에서 증가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가상자산 표준 규제를 제정하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FATF는 2019년 가상자산 트래블룰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FATF 가상자산 실무 그룹(VACG)은 각국의 권고안 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6월까지 작성하고, 내년 1분기 조사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IMF는 올해 2월 가상자산 취급에 대한 공동 행동 계획인 '가상자산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9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G7의 가상자산 논의는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규제 원년 흐름 속에 이뤄졌다. G7 의장국인 일본과 G20 의장국 인도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공동 규제 틀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 정상들은 서로 다른 가상자산 규제 속에서 발생하는 규제 차익을 막고, 북한의 해킹 등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G7 정상은 '경제 회복 안보' 성명문에서 "우리는 국가 안보에 중요하거나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들이 적절하게 통제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1조원 날리고도 주인 못찾은 28㎓ 주파수… '세계 첫 5G의 비애'



이통 3사 모두 할당 취소
주파수 경매 등 5년간 1조 투입
기지국 조건은 10%밖에 못채워
대역 지원하는 스마트폰도 없어

제4이통사 유치한다지만…
기지국 건설 등에 천문학적 비용
정부 적극적이지만 기업 '시큰둥'
"지하철 등 특정공간 활용" 의견도

국내 이동통신 3사가 28㎓ 서비스를 사실상 포기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주파수를 활용한 새 사업자 발굴에 애를 먹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통사 유치를 위한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지만 후보 사업자로 거론되는 기업들 모두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외면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실패 리스크를 안고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 만한 비용적인 혜택이 제공돼야 사업자들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잇따른 할당 취소…28㎓ 어쩌나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28㎓에 대해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SK텔레콤은 이용기간을 단축하고 할당취소 유예를 받았지만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이달 말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통사가 주파수 28㎓를 할당받은지 5년 만에 주인을 모두 잃게 됐다.

그동안 이통사에서는 28㎓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통 3사는 2018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SKT 2073억 원, KT 2078억 원, LG유플러스 2072억 원 등 총 6223억 원을 투입했다. 또 할당 조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국에 기지국을 건설하는데 2000억 원 가량이 사용됐고, KT의 경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범사업 당시 2000~300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5년간 이통3사가 28㎓에 사용한 금액은 어림잡아 1조 원이 넘는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8㎓활성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기지국은 할당 조건의 10%에 불과하다. 국내에서는 아직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기조차 출시되지 않았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용 방안을 찾고는 있지만 아직 뚜렷한 활용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 주파수 할당 취소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28㎓ 주파수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28㎓ 주파수가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는 효과를 검증해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이 분야에서 사업이 가능한 기업이 있는지 계속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고 국가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제4이통 유치 정책 발표…기업선 "글쎄" = 과기정통부는 내달까지 제4이통사 유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신사간 경쟁을 촉진시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기업에선 제4이통사업자 진출에 대한 관심이 적다. 국내 금융권과 IT업계 등에서 제4이통사 후보로 여러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은 사업 진출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제4이통사 진입의 가장 걸림돌로 '비용'을 꼽는다. 28㎓주파수의 경우 현재 5G 통신서비스에 주요 이용되는 3.5㎓에 비해 20배 가량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기지국 건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투입되는 비용이 많아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통3사가 기지국 구축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활용성에 비해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힐 정도다.

이 때문에 전국적인 통신망보다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의 활용도가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하철이나 건물, 공연장 등 지정된 한 공간 내에서 빠른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내달 발표되는 정부의 정책 발표에 비용 절감에 대한 지원방안이 담긴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사업진출에 대한 검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제4이통사 후보로 거론되는 한 기업 관계자는 "제4이통 진출에 대해 내부적으로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기업의 조건에 맞는 지원방안이 나온다면 모를까, 현 상태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네카오, 공정성 시비에 제평위 운영 잠정 중단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 제평위가 운영되는 동안 심사와 퇴출 기준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위원들의 특정 이념과 진영 편향 논란이 지속됐다.

제평위 사무국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위원 전원회의'에서 제휴평가위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제휴평가위는 뉴스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자율기구로, 2015년에 준비위원회가 출범한 이래로 2016년부터 7년 동안 양사의 뉴스 입점 심사 및 제재를 담당해 왔다. 제평위는 언론인권센터, 한국지역언론학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기자협회, 방송협회, 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 시민단체와 언론 유관단체 등 18개 단체에서 추천받은 인사 18명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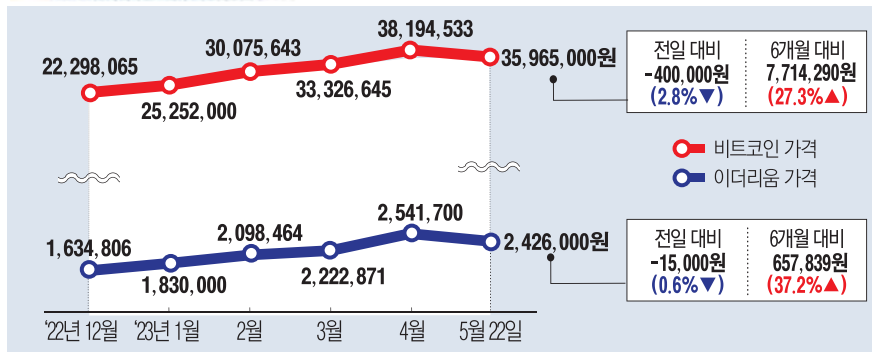
네이버와 카카오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현재의 제평위 외 새로운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내외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며 "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욱 나은 대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제휴평가위의 잠정 활동 중단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입점 심사도 당분간 중단된다. 양사는 운영 중단 기간 공청회 등 외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제휴 평가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발전된 미디어 환경을 구축할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제평위 공정성 논란이 이슈화됐던 2021년 말부터 탈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 다음 뉴스 서비스 개편과 카카오톡 '카카오 뷰' 서비스에 뉴스 도입 등으로 다양한 변화를 모색해왔다. 네이버도 제평위 운영에 부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기된 실검 부활 논란과 여권의 비판 등으로 뉴스 서비스 운영에 변화가 예고 됐다. 김나리 기자 nari34@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3년 5월 22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153,300	-2,300 (1.5%▼)	이오스	1,145	-38 (3.2%▼)
리플	618	-13 (2.1%▼)	트론	103	5 (5.1%▲)
솔라나	26,410	-850 (3.1%▼)	스텔라루멘	118	-2 (1.7%▼)
에이다	487	-4 (0.8%▼)	비트코인에스브이	46,380	-80 (0.2%▼)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공사비 더 오르기 전에…” 불붙는 아파트 청약

1월 0.3대1→4월 5.6대1 경쟁
올해 분양가 12% 가파른 상승
규제 완화 영향 원자잿값 반영
전문가 “분양가 상승 계속될것”

아파트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청약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공사비와 이를 반영한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양가는 최근 1년여간 가파르게 상승했고 당분간은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22일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14~2023년) 동안 아파트 분양가는 연평균 8.1% 상승했다. 2020년(0.7%)은 보합세였고 2021년(-6%)은 하락했는데 작년과 올해는 각각 16%, 11.7%나 올랐다.

2020~2021년은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여 통제받는 곳이 많아 상승이 제약됐지만 이후 규제가 완화되고 높아진 원자잿값이 반영되면서 오름폭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고분양가 단지 1순위 청약

단지명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전용 84㎡ 분양가 (최고가 기준)
광명자이더샵 포레나	10.48대 1	10억4550만원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3.83대 1	12억3500만원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양가 오름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5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00으로 전월보다 9.1포인트 상승했다. 100은 기준점으로 그 자체가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름폭이 컸다는 것은 주택사업자들이 분양가 인상 의지가 강해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고분양가 우려가 있던 단지가 흥행한 것도 가격 인상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용 84㎡가 10억 원 대로 나온 광명자이더샵포레나와 경기도 용인에서 첫 12억 원대 분양가를 책정한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등은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오히려 예상보다 큰 인기를 얻으며 마감했다. 청주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도 1순위 경쟁률이 70대 1을 넘겼다.

청약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공급자들은 더욱 자신감 있게 분양가를 높여 부를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분위기가 순환고리를 만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 분양가 상승 지속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청약경쟁률도 오름세다. 직방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월 0.3대 1까지 떨어졌던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지난달 5.6대 1까지 올라왔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월부터 ㎡ 당 194만3000원으로 높아진 것도 분양가 인상을 뒷받침할 재료로 꼽힌다.

건설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 확대도 분양가 상승이란 방향성을 나타낸다. 건설사들이 수년 전 계약 당시보다 더 많은 공사비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임을 강하게 표현하면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시 산성구역 주택재개발 시공사업단(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은 조합에 공사비를 3.3㎡당 445만 원에서 620만 원으로 높이자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조합은 현재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 권선6구역 재개발은 공사비 갈등으로 일반분양이 지연되고 있고 서울 서초구 신동아아파트도 공사비 갈등을 겪는 중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공사비 갈등이 이어지는 것은 기존 분양가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보규 기자 jbk@



철거 앞둔 화정아이파크 인근 상인 만나 안전 협의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앞두고 주변 상인들과 회의를 열고 상생 협의에 나섰다.

HDC현대산업개발 A1추진단은 22일 오전 현장사무실에서 광주서구사고수습지원단과 금호하이빌 상가번영회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실현 상생협의체 회의〈사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열린 회의에 주변 상인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인근 주민의 안전과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 등을 설명했다. 금호하이빌 상가번영회로부터 인근 주민, 상인의 우려 사항도 경청했다. 회의에서 양측은 앞으로 상생협의체를 통해 안전 실현을 위한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필수 금호하이빌 상가번영회장은 “주민과 상인, 상가를 찾는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소통하며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현호 기자 m2h@

DL이앤씨 ‘사업비 7000억’ 남해-여수 해저터널 수주

터널 구간 포함 8㎞ 국도 건설
해저 분기터널 설계 높은 점수

DL이앤씨가 해저 분기터널이라는 설계 차별화 전략으로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를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 여수 신덕동과 경남 남해 서면을 연결하는 총 8.09㎞의 4차로 국도를 신설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6974억 원으로 해저 분기터널 구간(5.76㎞)을 포함하고 있다. 오는 2031년 준공 시 남해-여수 간 이동시간이 기존 1시간 3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위치도 사진제공 DL이앤씨

DL이앤씨는 입찰 참여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터널 본선 외에 남해군 북측으로 연결로를 신설한 차별화된 설계안을 제안해 가장 높은 기술점수를 받았다. 이 사업의 기본계획은 전남 여수 신덕동에서 관광자원이 우수한 경남 남해 서상리를 잇는 남측 단방향 노선이었다.

하지만 DL이앤씨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방안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해저 분기터널로 남해 서북쪽의 남상리를 함께 연결하는 설계안을 제안했다. 남해 남측과 북측 모두 여수와 연결해 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DL이앤씨는 해저 분기터널 설계를 통해 터널 시공 막장을 기존 4개에서 8개로 2배 확장했다. 막장이 늘어나면 동시에 시공할 수 있는 구간이 늘어나는 만큼 공사 기간을 13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다. 연결로 터널도 많아져 유사시 대피와 구난, 연기배출 성능도 2배로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아울러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로 완성됐다. DL이앤씨는 자체 개발한 ‘BIM(빌딩정보모델링) 터널 설계 패키지’를 통해 차별화한 설계안을 만들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해저 지반 조건을 정밀하게 분석 후, 최적의 선형을 탐색하고 BIM 및 지리정보체계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으로 터널 발파 설계까지 진행했다. 동시에 DL이앤씨는 해저터널의 내화 성능을 높이고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단열·내화 콘크리트를 적용한다.

정용욱 기자 dragon@




E 이로운
S 세상을
G 그리다
BNK금융그룹은 ESG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음 세상을 그려가겠습니다!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 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벤처투자 BNK 신용정보 BNK 시 스 템 BNK 썸농구단

동시다발로 치솟는 연체율 … 부실뇌관 된 영끌·빚투

5대銀 4월 말 연체율 0.304%
지난해보다 0.118%p 올라
신규연체율·고정이하여신도 증가
카드사 연체율 대부분 1% 넘겨
9월 원금·이자 유예 종료에 위기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전 금융권에 걸쳐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대출 부실' 위험이 현실화 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3년간 급증한 대출과 가파르게 올랐던 금리 상승 여파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차주들의 부채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1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5년 내 최고수준을 기록했고,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올 하반기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등 무리하게 대출을 실행한 차주들이 상환 한계에 처하면, 부실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빚 못 갚는 가계·기업 속출…은행 연체율 5년 내 최고=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4월 말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평균 0.304%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0.186%)과 비교하면 0.118%포인트(p)나 증가했다. 전월(0.272%)과 비교하면 0.032%p 올랐다.

대출 주체별로는 가계(0.270%)와 기업(0.328%) 연체율은 한 달 사이 각 0.032%p, 0.034%p 늘며 1년 새 각 0.116%p, 0.118%p 상승했다.

부실 위험의 척도를 나타내는 신규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NPL·부실 대출채권) 비율도 일제히 증가했다. 신규연체율은 해당월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월 말 대출잔액으로 나눈 것으로, 새로운 부실 증감 추이를 보여준다. 고정이하여신은 대출금중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신규 연체율은 평균 0.082%로, 올해 3월과 작년 4월보다 각 0.008%p, 0.04%p 높아졌다. 고정이하여신 비율(0.250%)도 0.008%p, 0.016%p씩 올랐다.

5대 은행 2023년 3월 연체율·신규연체율·고정이하여신(NPL) 비율

(단위: %, %p)

	연체율			신규연체율			NPL비율
	가계	기업	합계	가계	기업	합계	
평균	0.270	0.328	0.304	0.072	0.094	0.082	0.250
전월대비	0.032	0.034	0.032	0.002	0.012	0.008	0.008
전년 동월대비	0.116	0.118	0.118	0.028	0.046	0.040	0.016

※ 출처: 5대시중은행 취합

5대 시중은행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은행별로 3~5년 만에 최고치를 넘어섰다. A 은행의 4월 가계대출 연체율(0.32%)은 2018년 4월(0.32%)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은행권은 예상보다 빠른 연체율 상승 속도에 당황하는 모양새다. 특히 9월 원금·이자 유예 종료가 맞물리는 하반기에 위기가 본격화 될 것으로 우려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분간 고금리가 계속 될 것"이라며 "변동금리 비중이 큰 국내 대출 특성상 작년 하반기 급등한 금리에 따른 직접적 상환 부담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출 부실' 악화…약한 고리 2금융권발 금융위기 가능성 '고조'=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부실 대출에 더 취약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연체율 상황은 더 심각한 상태다. 카드사의 경우 고금리인 카드론과 리볼빙 등을 쓰고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면서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저축은행업계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5.1%로, 지난해 말(4.04%)보다 불과 3개월 사이 1.1%p 올랐다. 이 비율이 5%를 넘어선 것은 연말 기준으로 2018년(5.05%) 이후 처음이다. 올해 1분기 연체율도 5.1%로 집계됐다. 5%를 웃도는 연체율은 2016년 말(5.83%) 이후 약 6년 여만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카드사의 카드론과 결제성 리볼빙 이용 금액도 크게 늘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은 34조1210억 원으로, 작년 말(33조6450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늘었다. 2019년 말 기준 29조 원대였던 카드론 잔액은 2020년 말 32조 원, 2021년·2022년 33조 원대로 증가세다.

7개 카드사(신한·삼성·KB·롯데·우리·하나·현대)의 올해 4월 리볼빙 잔액은 7조1729억 원으로 1년 전인 작년 4월(6조2740억 원)보다 1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연체율도 고공행진 중이다. 올해 1분기 카드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을 뜻하는 카드사의 연체율은 대부분 1%를 넘겼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유예를 하더라도 부실을 이연시키는 것이고, 만약 종료가 된다면 부실이 현실화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범근 기자 nova@

봄나들이 차량 증가… 車보험 손해율 고공행진

4대 손보사 1~4월 손해율 76.9%
엔데믹 이후 사고건수 늘어나
원가상승 더해 실적에 악영향

올해 들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다시 고공행진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건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손보사들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는 4대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1~4월 누적손해율은 평균 76.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76.7%)과 비교해 0.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가 77.2%로 가장 높고 현대해상 77.0%, KB손해보험 76.8%, DB손해보험 76.8% 등의 순이다. 업계는 손해를 보지 않는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을 78~80% 이하로 본다.

지난해 크게 떨어졌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다시 들썩이면서 업계는 올해 실적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나들이 차량 증가에 따른 사고건수 증가로 5월엔 손해율이 악화될 것"이라며 "보험료 인하 반영에 따른 수입보험료 감소로 연중 실적도 지속 악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지난해 손보사의 호실적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가 컸다. 그러나 올해는 1분기에 이미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가 본격화된 상황이라 실적 선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게업계 중론이다. 1분기 손해율이 이미 적정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봄철 나들이객이 늘어나며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자동차보험 관련 원가상승 요인도 작용한 탓이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코로나19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된 것과 함께 나들이객 증가가 원가상승 요인과 맞물리면서 추후 손해율이 더 상승할 것"이라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오르면 역마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지난 1분기 삼성화재·현대해상·DB·KB손해보험 등 자보 시장 '빅4'를 포함한 총 7개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2%가량씩 일괄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하로 기대 수입이 줄어든 터라 자동차보험의 수익성 방어가 어려워진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손보업계의 순익 증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이례적으로 떨어진 영향이 컸다"면서 "올해는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서지연 기자 sjy@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40여곳 참가… KB국민은행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KB국민은행은 단일 규모 국내 최대 취업박람회인 '2023년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코엑스 B홀에서 개최된 이번 취업박람회는 이날과 23일 양일간 진행되며, KB우수기업, 유관기관의 우수 회원사 및 대기업 협력사와 코스닥 상장사 등 240여 개의 구인기업이 참여해 구직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개막식에는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KB홍보모델 김연아와 배우 공유 등이 참석해 구인기업과 구직자들을 격려했다.

2011년 출범해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KB굿잡 취업박람회'는 총 누적 방문자 수가 113만 명에 달하며, 현재까지 총 4900여 구인기업이 참가했다. 8만2000여 건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3만2000여 취업 준비생이 일자리를 찾았다.

올해 취업박람회에서는 참여 구직자의 취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컨설팅관 △박람회 참가기업의 채용설명회 및 전문가 특강으로 구성된 '취업특강&설명회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재영 기자 ljy0403@

5대 은행 신용대출 금리, 7개월 만에 5%대로 하락

지난달 평균 금리 5.872%
작년 11월보다 1.14%p 줄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7개월 만에 5%대로 하락했다.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 대출금리 인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22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에서 지난달 취급된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872%였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5%대로 하락한 것은 지난해 9월(5.852%) 이후 7개월 만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연 5.60%로 가장 낮았고, KB국민은행이 연 6.27%로 가장 높았다. 4%대 미만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도 늘었다. 3월 5대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 중 연 4%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는 하나은행에서만 0.40%에 불과했다. 반면 4월에는 KB국민은행에서 3.50%, 하나은행 1.10%, 신한은행에서 0.80%의 차주가 연 4% 미만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았다.

5대 은행에서 취급한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10월 6.446%, 11월 7.016%로 점차 상승하다가 12월 6.918%, 올해 1월 6.496%, 2월 6.146%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후 3월 6.190%로 주춤했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4월 5%대로 낮아지며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5개월 새 1.14%포인트(p) 줄었다.

관건은 최근 신용대출 변동금리 지표로 활용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가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19일 기준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연 3.776%로, 한 달 전(연 3.554%)보다 0.222%p 인상됐다.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조달비용이 늘어나 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25일 발표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발표도 관전포인트다. 2월, 4월에 이어 이번에도 동결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오르면 신용대출 금리도 하락세가 더 이어지진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저축액 2배로 돌려주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들의 자금 조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모집규모는 지난해보다 3000명 더 늘어난 1만 명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만기 때 이자를 포함하면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모집규모 확대와 함께 요건도 완화했다.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청년으로,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같은 기간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중위소득 80% 이하)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의 신규 참여자도 300명을 모집한다.

김채빈 기자 chaebi@

삼성전자 편식한 외국인… 순매수액 80% '올인'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

외인 사자에 장중 6만9000원 올들어 9.1兆 매수세 몰리며 외국인 지분 1년여만에 52%대 이차전지는 차익실현 움직임 '반도체 바닥론' 3분기 기대 쑥

"삼성전자는 2분기 전체 실적도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한다. 메모리 가격 환경이 유리해지며 하반기 유의미한 이익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골드만삭스)

"경쟁사들이 메모리 업황 침체기에 설비투자 확장이나 공장 이전 등에 대한 투자에서 제한된 선택지를 가진 데 반해 삼성전자는 이 기회에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미즈호)

외국인 투자자의 '편식'이 심해졌다. 한국 주식을 연일 사고 있지만, 지난해 폭식하던 이차전지(배터리) 관련주 대신 삼성전자를 쓸어담았다. 외국인이 올해 사들인 종목의 80%가량이 삼성전자였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이차전지를 비우고 그 자리에 삼성전자를 담는 모양새다.

1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삼성전자가 2분기에 바닥찍고 일어설 것이란 전망도 잇따른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결정한 후 외국계 증권사들은 목표주가를 잇달아 상향했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7만4000원에서 7만7000원으로, HSBC는 7만5000원에서 8만8000원으로, 미즈호는 7만7000원에서 8만 원으로 각각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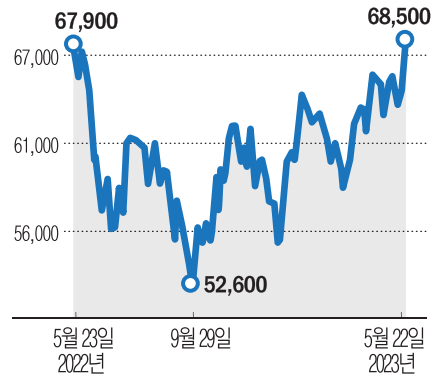
◇'7만전자' 이끄는 외국인 =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15%(100원) 오른 6만8500원에 마감했다. 장 중 6만9000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외국인은 '칠만전자'(삼성전자 주가 7만 원)를 견인하고 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11조2703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이 중 80%가 넘는 9조1402억 원을 삼성전자에 쏟아부었다. 지난 한 주(15~19일)에만 1조 원 넘게 사들였다.

덕분에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율은 지난 19일 기준 52.08%로 올라섰다. 외국인 보유율이 52%대에 들어선 건 지난해 3월 4일(52.05%) 이후 처음이다. 당시 주가는 7만1500원을 기록했다. 또 코스피 시가총액 19%에 달하는 삼성전자에 외국인 뭉칫돈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 전체 외국인 보유 비중도 32%대를 약 1년 만에 회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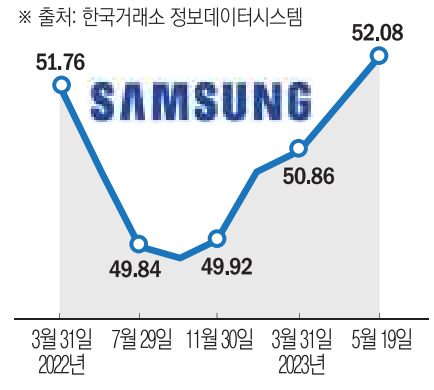
이차전지에서는 자금을 빼고 있다. 1분기 국내 증시를 견인해 왔던 이차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이 고점에 이르자 차익실현과 함께 반도체로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은 5월 들어 LG에너지솔루션을 567억 원 순매도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3429억 원 순매수했으나, 5월 들어 월간기준 순매도로 전환했다. 외국인은 삼성SDI도 5월 들어 189억 원어치 순매수하고 있지만, 매수세는 약해졌다. 외국인은 이달 16일까지 삼성SDI를 내다 팔다가 소폭 순매수로 전환된 상태다.

삼성전자 주가 (단위: 원)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단위: %)

※ 출처: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1분기 시장을 견인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비엠 등 이차전지 소재 업종의 외국인 순매수도 약세다. 외국인은 5월 들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각각 3635억 원, 915억 원 순매도했다. 포스코퓨처엠(-1000억 원), 엘앤에프(-649억 원) 등도 순매도했다. 이차전지 업종에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민 큰 개미들, 반도체 사도 될까 =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반도체를 살 것인가. 외국인이 최근 반도체주를 쓸어담는 이유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도체주의 강세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이달 초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AMD는 17.9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9.33%, 엔비디아 8.14%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전방 수요는 미국 등 주요국 소비 경기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과 직결돼 있으며 현재 거시경제 환경이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실적 저점 통과 전망, 낮은 수급 부담 등 여타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맞물리면서 주가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3사(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가 모두 감산에 동참하면서 공급 과잉이었던 메모리 수급이 3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라며 "3분기부터 진행될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개선에 따른 삼성전자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종은 수급 개선, 가격 하락 완화, 재고 감소 등으로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돼 반도체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라면서 "삼성전자 역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 폭 확대가 전망된다. 따라서 연말로 갈수록 주가의 저점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박상인 기자 si2020@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전세사기·SG發 주가폭락, 관계부처와 전방위 대응"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금융안정 목표로 감독역량 집중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나서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세사기,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이복현 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해 일부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국내 금융산업은 양호한 유동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금리·고물가, 경기둔화 압력이 금융시장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저하 등 잠재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속도감 있게 실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금융감독자문위원회 김준기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진행 하에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자문위원회가 그간 금융감독원과 외부 전문가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자문기구로 자리매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금융감독원 스스로의 혁신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김병칠 부원장보는 "금융시장·금융회사·부동산PF 리스크, 은행의 금융업 과점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금융산업의 구조적 문제, 금융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등 세계적 긴축 여파 등에 기인한 어려움에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혁신 및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AI 기술발전, 금융권 ESG 확대 등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엔데믹에도 韓증시 성적 '꼴찌 수준'

글로벌 증시 일제히 반등하는데 주요 10개국 중 증시 상승률 9위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선언 이후에도 한국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WHO가 엔데믹을 발표한 지난 5일(현지시각) 이후 2주간(5월 8일~19일) 코스피와 코스닥 수익률은 평균 0.53%를 기록하며 주요 10개 국가 증시 가운데 홍콩(-3.00%) 다음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아르헨티나 메르발(12.36%), 일본 니케이225(5.66%), 독일 DAX30(3.72%), 미국 나스닥(3.45%) 등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반등했다.

특히 일본은 평균 상승률이 4.91%로, 아르헨티나 메르발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상승률 1위다. 2위는 대만 가권(3.51%) 지수가 기록했다. 이 기간 일본 닛케이225와 토픽스 지수는 각각 5.66%, 4.15% 상승했다.

일본은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소비 회복 효과에 힘입어 기업실적 개선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최근 일본 경기는 민간소비,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중으로 타이트한 고용시장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외국인 관광 재개 등도 내수 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같은 일본 증시 강세는 최근 국내 상황과 대조적이다. 국내 증시는 코로나19 2021년 고점 이후 크게 밑도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이 엔데믹 이후에도 반도체 업황 부진, 중국 리오프닝 지연 등으로 경기 회복이 더디게 나타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회인 기자 hihello@

"올 PE 엑시트 감소… 세컨더리 시장 가격인하 지속"

프랭클린템플턴 사모펀드 보고서 PE 투자회수율 금융위기 후 최저

거시경제 환경악화로 올해 전 세계 사모펀드들의 투자금 회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세컨더리 시장 등의 자산 가치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은 2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사모펀드 시장을 전망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프랭클린템플턴은 "거시경제 환경 악화로 사모펀드(PE)의 엑시트활동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러한 기조는 2023년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모펀드들의 지난해 말 기준 투자 대비 회수 비율은 0.40배 미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상태다.

프랭클린템플턴은 "갑작스러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은 금융시스템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이뤄지던 기존 밸류에이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높은 유동성에 힘입은 자금조달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다만, 재무 안정성이 뛰어난 우량기업들은 밸류에이션 하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전했다.

프랭클린템플턴은 벤처캐피탈에 대해 "본격적인 가치 재평가가 이미 진행중이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합의할만한 수익률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암호화폐와 암호화폐거래소를 둘러싼 부정적인 정서가 확산하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거리가 먼 스타트업들마저 타격을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블록체인 인프라, 스마트 계약시스템, 웹 3.0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과 같이 탈중앙화 트렌드와 밀접하게 연관된 회사들은 언젠가 메타, 넷플릭스 및 아마존 등으로 대표되는 가상화 시대 유망기업들처럼 각광받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 등이 매입한 자산을 재인수하는 시장인 '세컨더리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프랭클린템플턴은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 조달이 용이했던 시기에 출자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현재의 척박한 투자금 회수 환경에서는 세컨더리 펀드 운용사들이 출자 약정을 위해 새롭게 자금을 모집하든가, 보유한 포트폴리오 자산을 처분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실질적이면서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만큼 올해 부동산 자산은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매출 줄었지만 '믿는 구석' 있네 면세업계 "다이궁 수수료 인하"

'계륵' 中 다이궁 의존도 낮추며 매출은 줄었지만 체질개선 효과 신라, 영업익 2배 가까이 올라

관세청 "면세사업 경쟁력 위해 송객수수료 정상화 대책 발표"

국내 면세점업계가 올해 1분기 매출이 줄었음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수익성 개선에 발목을 잡았던 중국 다이궁(보따리상) 송객수수료를 낮추는데 성공하며 영업이익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면세업계는 향후 송객수수료를 더 낮춰가겠다는 계획이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롯데면세점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75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5% 감소했다. 신라면세점 역시 같은 기간 매출액이 37.8% 줄어든 6085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면세점의 1분기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33.8% 감소한 5112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요 면세점이 공통적으로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건 중국 다이궁의 발길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다이궁 송객수수료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줄었다는 것이 면세업계의 중론이다.

다이궁은 '물건을 대신 전달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국의 면세품을 저렴하게 구매해 중국에서 판매, 시세 차익을 얻는다.

다이궁은 면세업계에서 계륵 같은 존재다. 사드보복, 코로나19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요우커)의 유입이 막힌 상황에서 다이궁은 면세점의 매출 창구였다.

하지만 이들의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면세업계는 막대한 송객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구매를 알선한 여행사와 보따리상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뜻한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다이궁 송객수수료는 10%대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여행객 발길이 끊기자 다이궁 유치 경쟁이 심해지면서 송객수수료는 지난해 말 매출 대비 40% 후반대로 크게 뛰었다. 2021년 기준 다이궁 송객수수료는 3조8745억 원이었다. 이 때문에 수년전부터 다이궁 의존도를 줄여야한다는 게 면세업계 과제로 꼽혀왔다.

송객수수료가 치솟은 상황에서도 면세업계가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자 정부가 나섰다. 관세청은 면세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송객수수료 근절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에 송객수수료 정상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윤태식 관세정장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심화하고 있는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과 같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면세업계는 다이궁의 발길이 감소하는 등 일부 출혈이 있더라도 올해부터 송객수수료 비중을 기존 40% 후반대에서 30% 초반까지 낮췄다. 그러자 영업실적도 곧바로 개선됐다.

롯데면세점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35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흑자전환했다. 이어 신라면세점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8.4% 늘어난 252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면세점도 243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전환했다. 면세업계는 향후 송객수수료를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인 10%대까지 더 낮춰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에 따른 매출 감소는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 실적을 만회하겠다는 게 면세업계의 전략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당장 매출이 줄어드는 출혈이 있더라도 매출의 40% 수준인 송객수수료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매출은 줄어들었어도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19일(현지시간) 시드니 시청에서 열린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개막식 행사에서 이동규(왼쪽부터) 롯데홈쇼핑 커뮤니케이션부문장, 안성준 KOTRA 소비재바이오실장, 신성주 롯데지주 정책지원팀 상무, 이태우 주시드니한국총영사, 카일리 벨 NSW주 투자청 통상투자 그룹장, 강흥원 호주시드니한인회장, 박창은 KOTRA 무역관장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홈쇼핑

롯데, 호주서 6200만弗 수출상담 성과

KOTRA와 '브랜드 엑스포' 개최
中企 100곳·바이어 150곳 참여

롯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18~21일 호주 시드니에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진행해 6200만 달러(약 818억 원)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는 2016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롯데홈쇼핑의 상생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 롯데지주와 유통 계열사가 참여하는 그룹 차원의 통합사업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롯데 유통사와 식품사도 참여해 상생 사업에 힘을 보탰다.

호주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 100개사가 수출 상담회에 참여했다.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지역 바이어 150개사가 몰렸으며 누적 상담건수 595건, 상담금액은 6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상담회 현장에서는 현지 바이어들에게 '국밥', '된장찌개' 등 한식을 비롯해 '세럼', '크림', '고데기' 등 K-뷰티 상품을 선보였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이 행사를 통해 총 16회 열어 누적 상담건수 8513건, 수출 상담금액은 약 1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동규 롯데홈쇼핑 커뮤니케이션 부문장은 "2018년 호주에서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개최한 이후 5년 만에 오세아니아 전 지역으로 규모를 확대해 준비했다"며 "참여 기업들이 오세아니아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공모가 정해진 나라셀라… 246억 어디에 쓸까

나라셀라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	우선순위	금액
시설자금	물류센터 구축	3	1500
운영자금	상품 포트폴리오 확대	1	5000
	리테일 매장 확대	2	2000
	디지털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5	7000
	해외법인 운영자금	6	2196
	도운빌딩(신사옥)	4	1893
채무상환 자금	차입금 상환	7	5000

※ 출처: 금감원 전자공시



희망밴드 하단인 2만원 결정

와인 수입 유통사 첫 코스닥 상장
美 등 해외 고가와인 매입에 50억
직영 소매점·물류센터에도 투자

와인 수입 유통사 최초로 코스닥 상장에 나선 나라셀라의 공모가가 가장 낮게 확정된 가운데 공모자금 사용처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나라셀라 공모가는 희망밴드 하단인 2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모로 조달되는 자금은 290억 원이며, 구주매출과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회사로 유입되는 순수 자금은 246억 원이다. 나라셀라는 해당 자금을 크게 운영자금 181억 원, 채무상환 50억 원, 시설자금 15억 원 등으로 나눠 올해 안으로 지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모자금 사용 우선순위에 따르면 프랑스와 미국 등의 오픈마켓을 통해 고가 와인 매입에 50억 원을 사용한다. 나라셀라는 올해 120억 원 규모로 고가 와인 확보 계획을 세워뒀으며 공모 자금 외 나머지 70억 원은 자체 조달할 방침이다.

또 회사는 와인타임과 와인픽스 등 와인 직영 소매 판매점 확대에 20억 원, 도심형 물류센터 구축에 15억 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옥 내 와인 문화공간 구축에 19억 원 등을 투입한다. 나라셀라는 수도권 와인 수요 창출·대응을 위해 와인 직영 소매 및 가맹점 등 리테일 매장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송파구 또는 경기도 하남시 등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높은 지역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등 서울 강북권 접근성이 높은 곳에 물류 창고를 임차한다. 이를 통해 당일 배송이 가능한 물류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리테일 매장은 하반기 중 2개 점포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와인 문화공간의 경우 올해 완공을 목표로 신사옥 4~5층에 와인 레스토랑, 6층은 와인 관련 콘텐츠 제작 키친 스튜디오, 7층에 라운지 바를 건설 중이다. 나라셀라는 이들 공간을 통해 와인 문화 대중화와 함께 VIP 고객을 확보하고 충성 고객으로 유도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꾀한다.

공모자금 중 가장 많은 70억 원은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를 위한 가맹점 지원 사업에 투입된다. 나라셀라는 연말까지 70여 개 가맹점 유치가 목표다. 계열회사 와인원의 디지털 판매플랫폼 '1KM WINE' 입점 점포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국 법인 물류센터 확보와 미국 현지 와인 재고 확보에 22억 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50억 원을 쓴다. 회사는 신사옥과 관련해 하나은행으로부터 187억 원을 차입한 바 있다. 이중 이자율이 5~6%대로 높은 차입금을 우선 상환할 예정이다.

한편, 나라셀라는 23일까지 일반청약 진행 후 다음달 2일 코스닥에 상장된다. 마승철 나라셀라 대표는 "나라셀라는 와인 관련 기업 최초 코스닥 상장사라는 지위를 발판 삼아 글로벌 대외 신인도를 끌어올리고 미개척 와이너리·인기 와이너리와의 거래에서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2030의 77%, 홈플러스 다시 찾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6개월간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2030세대 고객의 재구매율이 약 77%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재구매율은 특정 기간 2회 이상 구매 고객 비율로, 2030세대 고객 4명 중 3명 이상이 다시 홈플러스를 찾아 상품을 구매했다. 홈플러스는 젊은 고객들이 홈플러스를 다시 찾은 데는 관심사에 맞는 멤버십 마케팅과 상품 경쟁력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제주삼다수 '옥스팜 트레일워커' 공식 후원

2리터 제품 1200여병·텀블러 제공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일대에서 진행된 '2023 옥스팜 트레일워커'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삼다수를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가 주최하는 '옥스팜 트레일워커'는 4명이 한 팀을 이뤄 38시간 이내에 100km를 완주하는 도전형 기부 행사다.

참가자들은 100km를 직접 걸으며 물과 생계를 위해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해 보고, 팀원들과 힘을 합쳐 완주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참가자들의 성공적인 완주를 응원하고자 매 코스마다 삼다수를 배치했다. 2리터(L) 제품 1200여 병과 개인 텀블러를 제공해 페트병 배출을 최소화했다. 올해 대회에는 120개 팀, 480명이 참여했다. 참가비와 기부펀딩을 통한 기부금 1억5520여만 원은 전 세계 긴급구호 현장에 전달돼 식수 및 위생지원 사업, 자립을 위한 생계활동 등에 사용된다.
남주현 기자 jooh@

조희연 항소심…"합법 채용" vs "공정 훼손"

'해직교사 특채 혐의' 1심선 유죄
檢 "직권 남용으로 특정 인물 채용"
조, 재판 출석 "어떤 위법도 없었다"
조희연 측 "비리 아닌 정책적 결정"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특별채용과 관련해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저는 결코 부끄럽게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육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 사건 특별채용은 5명의 내정자 이외의 다른 지원자들에겐 기울어진 운동장에 해당해 애초에 동등한 경쟁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포장하고, 법령을 준수하려는 교육청 인사담당자들을 보신주의라 폄하했다"며 "부정한 인사 청탁에 대한 해결을 화합과 통합의 차원이라는 등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공개경쟁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특별채용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고, 편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공개경쟁인 것처럼 가장, 전교조가 요청한 특정 인물을 채용해 신규 교사들의 임용 기회를 박탈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해직교사 복직은 피고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피고인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직권남용과 채용비리라는 프레임이 제대로 걸렸다"며 "이 사건 특별채용 행위는 채용비리가 아니라 정책적 결정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설령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교육감직을 박탈할 정도까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해직 교사 복직이 필요했고, 절차적으로도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했다는 게 조 교육감 측의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중에는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과 단일화한 후보도 포함돼 있다.

원심은 조 교육감이 교원 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채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전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7월 10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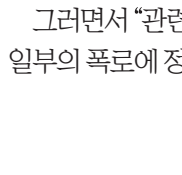
송석주 기자 ssp@·정유정 기자 oiljung@



덕수궁 돈덕전 재건 현판식 최응천(왼쪽 네 번째) 문화재청장 등 참석 내빈들이 22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돈덕전에서 열린 '돈덕전 재건 기념 현판 제막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고종 즉위 40주년 기념 행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된 돈덕전은 대한제국기 영빈관 및 알현관으로 사용됐다. 현판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본 현판을 실측한 후 전통안료를 사용해 만든 복제본이다. 돈덕전은 내부 전시 준비가 마무리되는 9월 정식 개관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태우 폭로 '공익 제보' 아닌 '비밀 누설'인 이유

피고인 주장 추측·과장… 국정 위협
본인 감찰받자 폭로, 동기·목적 의문
靑 인사검증 미흡했다면 개선했어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재직하면서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사진〉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공익 신고'와 '비밀 누설'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정당한 공익신고"라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김 전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제시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충족 요건은 공무상 비밀 여부, 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비공지성) 등 3가지다.

1심은 3가지를 따진 뒤 "비밀누설로 인해 대통령의 인사권, 대상자의 직무수행이 적절한지에 대한 일반의 의심이 야기됐고, 이러한 의심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및 대상자의 공무수행에 의한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에는 추측이나 과장이 상당 부분 개입돼 있다"며 "(특별감찰반원) 활동 당시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고인에 대한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춰보면, 폭로의 동기나 목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의 반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구청장은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비리를 고발한 만큼 국가기관만을 믿을 수 없어 언론에 제보했다거나, 제보에 언급된 일부 관련자들의 검찰 기소가 이뤄진 점을 들어 '정당한 공익신고'라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설령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일부 부적절한 활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도를 보완하거나 직무수행의 방법을 개선할 문제이지 범죄행위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함으로써 검증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이 기소되기에 이르렀지만, 일부의 폭로에 정당성이 있다고 하여 다른 부분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취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도 않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공익제보는 원칙적으로 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 언론에 먼저 제보한다고 해서 공익제보가 아니라고 할 순 없다"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의도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면 공익제보로 인정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수사관 출신이니까 사법처리 절차에 대해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잘 알고 있고,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도 있었을 것"이라며 "시스템을 뛰어 넘어서 의도가 있는 폭로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건이 정당하다면 다른 공무원들도 언론에 비밀을 누설한 뒤 공익제보였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익 제보 자체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이 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를 뛰어넘어서라도 허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김이현 기자 spes@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영장실질 심사 내일 열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우 유아인〈사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 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 작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유 씨와 공범 관계에 있는 미대 출신 작가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같이 진행된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초반에는 단순 투약 사범으로 보고 구속영장 검토를 하지 않았으나 조사 이후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마약 종류·횟수가 늘어난 점, 공범이 있는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 때문에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신청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경찰은 유 씨가 2020년께부터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유 씨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 유 씨 주변인들을 수사해왔는데 A 씨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지난 16일 2차 소환조사에서 대마 흡연 사실 일부만 시인, 대부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석주 기자 ssp@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극단선택 시도
법무부 "적시 응급조치"… 병원 이송

'희대의 탈옥수'로 불린 무기수 신창원(56)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창원은 전날 저녁 8시쯤 대전 교도소에 있는 자신의 감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당직을 서던 교도소 직원에 발견돼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장 교정 공무원이 적시에 빨리 발견해서 응급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신창원은 경북 북부 제1교도소(청송1교도소)에 수감됐던 2011년 8월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신창원의 부친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창원은 자필로 '죄송합니다'라고 적은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창원은 강도치사죄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교도소를 탈옥했으나 2년 6개월 뒤인 1997년 7월 검거됐다. 이후 20여 년간 독방에 수감돼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왔다.

이수진 기자 abc123@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3-359호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사망자의 사체를 행정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를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연고자가 있을 시 봉안된 유골을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12.

안산시 상록구청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사망일	사망(발견)장소	처리방법
			주소	사망원인	안치장소	
미상	남	미상	미상	2023.2.2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산 61, 상록수역 위편 야산	화장 후 봉안시설 안치
			미상	심폐정지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서해로 2448-3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2. 발생사항
- 2023. 2. 21. 13:33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산 61번지 야산 중턱에 변사자가 나무에 전기선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해 있는 것을 산행을 하던 외국인 JIA YUBAO가 발견함

3. 처리내역
가. 처리방법 : 화장 후 봉안시설 안치(안치일시 : 2023. 5. 11.)
나. 봉안장소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서해로 2448-3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연락처 : 031-240-9200
다. 봉안기간 : 2028년 5월 11일까지(5년)

4. 공고기간 : 2023. 5. 12. ~ 2023. 6. 11. (1개월)

5. 연락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110 (사동) 안산시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 전화번호 : 031) 481-5214, FAX : 031) 481-5574



당신의 일상은 변화의 연속이니까
우리는 먼저 준비하고, 미리 대비합니다.

교통사고 'Zero' 사회를 만드는 _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재해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_ 기업안전연구소
빅데이터 기반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 _ 헬스케어서비스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디지털교과서, 우수 교육콘텐츠 문턱 낮출 것”

이대영 교과서협회 이사장

에듀테크 등 사교육 확대 우려에 “교실에서 맞춤형교육 구현” 일축

정부개발보조금 2.5억으론 부족 “유지 운영비까지 포함해 책정을”



교육부가 디지털교과서 개발비 계획을 논의 중인 가운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려면 정부의 기존 개발비 보전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디지털교과서 개발 보조금형식으로 고정 지급해온 2억5000만 원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얘기다.

이대영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이사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교과서는 개발비와 유지운영비를 모두 포함해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며 “이에 따른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최근 디지털교과서 개발비 계획을 논의하면서 이를 ‘권장 구독료’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판매 권수에 따라 수익이 산정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향에 이 이사장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구독료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지만 중요한 것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지털교과서 개발·출원을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개발비를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간 서책교과서의 경우 발행사가 제대로 개발비를 보전받지 못했기 때문에 개발 및 수정·보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근 협회는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공통 플랫폼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AI 디지털교과서개발추진자문단’을 구성해 회원사와 교육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다“며 ”특히, 지난 16일 디지털교과서 공동플랫폼 개발 자문단 회의를 처음 개최했다. 공동 플랫폼 제공을 통한 디지털교과서 개발 부담과 시스템 운영 관리 부담을 더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디지털교과서가 우리나라 공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협회의 어깨도 무거워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일부 에듀테크 업체 등 사교육 시장을 키울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이 이사장은 “오히려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학교현장에서 사용하는 데에 대한 문턱을 낮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이사장은 “디지털대전환의 핵심은 교실에서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에듀테크 업체의 AI기반 콘텐츠 사용문턱(규제)을 낮추되 그 콘텐츠는 오롯이 학교현장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 목적 아래 교사(학교)들이 선택해 활용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이사장은 “(이번 디지털교과서 적용 과정에서) 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교육부와의 가격협상 체제 전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학교에 도입된다.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일반 선택과목부터 적용, 2026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2027년 중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우선 수학, 영어, 정보 3개 교과에 우선 적용된다. 교육부는 5월 중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8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손현경 기자 son89@

사진제공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현대차N ‘뉘르부르크링 레이스’ 8년 연속 완주·2개 부문 우승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N브랜드가 혹독한 코스로 유명한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사진〉에서 우승과 함께 8년 연속 완주에 성공했다.

20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독일에서 열린 ‘2023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에서 현대차의 엘란트라 N TCR과 i30 패스트백 N Cup Car가 각각 TCR 클래스와 VT2 클래스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엘란트라 N TCR은 3년 연속 TCR 클래스 우승을 달성함과 동시에 종합 순위 26위에 올라 N브랜드의 우수한 내구성과 주행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민재 기자 2mj@·사진제공 현대차

신장학회 이사장에 박형천 교수



박형천〈사진〉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교수가 ‘대한신장학회 제43차 국제학술대회(KSN 2023)’에서 차기 19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4년 6월부터 2026년까지 2년이다. 박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0년부터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및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우리 직원이 국대예요”… 오스템임플란트, 여자야구 메인후원사 됐다

엄태관 대표 “국대발탁 계기로 후원” 최송희 주임 “태극마크 옆에 CI 뿌듯”



왼쪽부터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최송희 선수, 황정희 한국여자야구연맹 회장. 사진제공 오스템임플란트

소속 직원이 여자야구 국가대표로 선발된 오스템임플란트가 여자야구 부흥을 위한 구원투수로 나섰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8일 서울시 강서구 마곡 중앙연구소 사옥으로 한국여자야구연맹 관계자들을 초청해 여자야구 발전기금 전달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여자야구 발전을 위한 후원금을 내기로 하고 ‘2023 제3회 BFA 여자야구 아시안컵’ 출전을 앞둔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는 “우리 직원이 국가대표에 발탁됐다는 소식을 듣고 여자야구에 관심을 갖게 됐고 아직 메인 후원사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도 알게 돼 후원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후원은 오스템임플란트 인테리어 사업부 최송희 주임이 여자야구 국가대표로 발탁되면서 성사됐다. 2016년부터 여자야구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최 주임은 일을 병행하면서도 2020년과 2022년 그리고 올해까지 국가대표로 활약하게 됐다. 회사에선 직영시공팀 소속으로 오스템임플란트가 시공하는 치과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최 주임은 “태극마크와 회사의 CI 패치를 나란히 단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게 돼 정말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안컵에서 최고의 투구를 하고 돌아와 회사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혜은 기자 euna@

사우디 첫 여성 우주인은 줄기세포 연구원

사우디 왕자 이후 38년만의 비행 스페이스X 타고 우주정거장 방문



사우디아라비아 첫 여성우주인 레이야나 바르나위가 손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사우디아라비아 첫 여성 우주인이 탄생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우주기업 액시엄스페이스(Axiom Space)가 조직한 민간우주여행팀 ‘액시엄2’에 속한 4명이 이날 오후 5시 37분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출발했다. 이들은 16시간 비행 후 22일 아침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착해 일주일 이상 체류하게 된다.

여행팀에는 사우디 정부가 선발한 사우디인 2명과 스포츠카 레이싱 팀을 소유한 미국인 사업가 존 쇼프너, 미국 우주비행사 출신 페기 휫슨(사령관)이 포함됐다.

사우디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인물 중 한 명은 남성 전투기 조종사인 알리 알카르니다. 나머지 한 명은 여성 줄기세포 연구자인 레이야나 바르나위다. 바르나위는 사우디 최초의 여성 우주인 타이틀을 얻게 됐다. 사우디인이 우주를 비행하는 것은 1985년 미국 나사가 발사한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 호에 승무원 중 한 명으로 사우디 왕자가 탑승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민간 우주여행 비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액시엄이 지난해 실시한 우주여행 티켓 가격은 5500만 달러(약 730억 원)였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DB손보, 고객과 희귀병 어린이 3000만원 후원

보험계약 시 300원 기부금 자동적립



DB손해보험은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돕기 위한 의료비 지원금 3000만 원의 전달식〈사진〉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지원금은 DB손해보험 고객들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보험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300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모금되었다. 이는 ‘고객 참여형 기부 이벤트’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DB손해보험은 13년동안 830여 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총 4억 10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해 왔다. 서지연 기자 sjy@

사진제공 DB손해보험

KB증권 ‘취약계층 캠핑’ 지원

KB증권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다문화 저소득층 가정을 초대해 서울 난지캠핑장에서 ‘행복뚝딱 깨비증권 그린캠핑’을 20~21일 1박2일간 진행했다.

KB증권은 참여 가족들을 위해 텐트 및 캠핑장비부터 푸짐한 먹거리 등 모든 물품을 지원했고, 캠핑 장소 마련과 전반적인 캠핑 운영에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협력했다. 캠핑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요즘 TV에서 캠핑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꼭 해보고 싶었다”면서 “즐거운 추억과 함께 갖고 싶었던 가방을 선물받아서 정말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복뚝딱 깨비증권 그린캠핑’은 작년 9월 ‘행복그린캠핑’에 이어 KB증권이 서울 난지캠핑장에서 진행한 두 번째 취약계층 지원 캠핑행사다. 박상인 기자 si2020@

인사

◆IBK투자증권 〈임원 승진·신규선임〉 ◇전무 △WM부문장 김기연 ◇상무대우 △자산관리본부장 박종걸 △종합금융본부장 이봉근 △감사본부장 이재덕 〈보임〉 ◇부문장 △WholeSale부문 이재일 △SME Solution부문 이위환 △S&T부문 박태동 ◇본부장 △금융상품영업본부 박정수 △사모펀드운용본부 박양수 ◇센터장 △영업부 박정용 △IBK WM센터 한남동 손공주 ◇부서장 △WM지원부 노영진 △금융상품영업부 문재경 △종합금융1부 이용선 △종합금융2부 박상현 △디지털개발부 양철수 △시너지추진부 박기현 △인사부 박현철 △재경부 권오현

부음

▲**양재권** 씨 별세, **양현우·소영** 씨 부친상, **박우혁**(제주은행 은행장) 씨 장인상 = 22일, 충남 공주시 이인농협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7시, 장지 공주 나래원. 041-853-4400

▲**유번자** 씨 별세, **김남희·김남균**(현대씨앤알 부장)·**김남진**(한국투자밸류운용 상무보) 씨 모친상, **김화섭**(일산 세이브더매쓰 수학학원 원장) 씨 장모상, **이현주**(인포젠 이사)·**송은경**(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팀장) 씨 시모상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4일 오전 9시, 장지 경기 파주 선영, 02-2227-7580

시론

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황 석 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미래 나라경제 기반…경쟁 치열
일부 일탈로 부정적 인식 크지만
규제 일변도보다 진흥책 병행해
다양한 참여·제도보완 유도해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불공정행위 사례의 여파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가상자산 법률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가 주된 내용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의 정의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금융회사 등에 부과하기 위한 법률로써,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이 성숙화 단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돼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며 이용자와 투자자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장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나 해당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논의돼 당장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형 가상자산 사업자를 중심으로 별도의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으나 시장에서의 반응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 시장감시에 대한 제도적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에서 원화 거래를 지원받는 거래소와 받지 못하는 거래소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받지 못하는 거래소는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수료 수익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과 자본잠식 상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하반기에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한 업소가 다수 등장할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2017년 9월 ICO 전면 금지 이후 현재까지 갈라파고스식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테라·루나 사건, FTX 사태, 강남지역 강력사건과 최근 문제가 된 사회지도층 인사의 일탈 행위 등으로 활성화나 진흥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투기와 불법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다.

가상자산은 전 국민의 4분 1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정을 가지고 있고 8명 중 한 명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시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투자하는 거래의 장이 됐으나 아직 사회적 시각은 투기의 온상과 불법의 장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정책과 제도적 불비가 나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역설적으로 고무적인 일은 가상자산 시장의 악재가 이미 대부분 터졌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SVB 사태 등으로 실물 및 예금자산의 불확실성이 고조돼 인터넷을 이용한 대량의 예금 인출이 발생하자 해당 자금이 가상자산시장으로 유입돼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사례 등도 발생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행위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적절한 감시와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정보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시장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통한 시장 안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규제와 육성, 진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나갈 정책 마련을 통해 시장 질서 확립과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가상자산 업권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법률 제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선적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적 시장감시와 규율 체계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부에서 보는 시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마련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해야 하며 시장에서 다양한 플레이어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하나의 산업과 문화로 성장하고 앞으로 디지털 신기술이 나은 최고의 혁신 기술로 다양한 부가가치 산업을 생산할 수 있는 혁신 산업이다. 또한 세계 각국은 비대면 환경의 지속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 등은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아이템이나 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이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핵심 가치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의 경쟁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정책발언대

'원전+α' 필요한 에너지 믹스



김 용 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 정책 기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CF100(Carbon Free 100%)을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역할을 중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세계적 흐름

2022년 7월에 발표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르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과 '에너지 안보 확립' 등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고, 원전 비중을 2021년 27.4%에서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전력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여름철과 겨울철 최대 전력량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서 안정적인 기저 에너지원 확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 '저탄소 에너지 기조'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맞춰 석탄발전 등 화학 발전소 비중을 낮춰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전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 넷제로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원전의 중요성을 방증한 바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 또한 원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의 역할만큼 중요한 것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이념의 잣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당연한 흐름임을 이해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산업 통상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정부와 보수정당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수출경쟁력 확보 위해서도 필요해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수출경쟁력이 중요한 대한민국에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 지난 대선 토론에서 주목을 받았던 RE100을 그 예로 꼽을 수 있다. 애플사는 2030년까지 제품 공급망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애플 협력업체에 RE100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삼성 계열사도 지난해 RE100 가입을 선언했다.

볼보, BMW, 다임러벤츠 등 많은 기업이 RE100을 이행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협력업체에 공급망 계약을 이미 취소했거나 앞으로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전 세계 많은 기업이 RE100에 참여하며, 탄소를 무역장벽에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은 신재생에너지가 지형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해 봐야 이들이 대한민국의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의 2022년 세계 에너지 통계 분석에 따르면 발전원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한국이 2021년 기준 약 6.7%다. 주요국가(영국 37.7%, 독일 37.2%, 이탈리아 24.9%, 미국 14.2%, 일본 12.8%, 캐나다 7.8%)와 비교해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기업들이 현실적 여건으로 RE100에 참여하지 못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여당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가 따로 있지 않다. 정치권에서 더는 에너지원을 갈라치기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기자수첩

금감원의 너무 일찍 푼 '선물 보따리'



손 희 정 / 금융부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선물 보따리'가 터졌다. 덕담 한마디에 여러 곳에서 '상생금융' 안이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광폭 행보에 따른 결과물이다. 채찍도 통했다. 치솟던 은행 대출금리가 '그'의 엄포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반응도 좋았다. 혜택을 받게 된 한 소상공인은 그의 '화려한 업적'에 고마움을 전했다.

하지만 '선의가 선행을 낳지는 않는다'는 말이 있듯 선물 보따리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2021년 8월 직후 수준까지 떨어졌다. 고금리로 줄었던 신규 가계대출은 1년 전의 두 배로 뛰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역대급 긴축을 예고했던 한국은행의 여정이 말짱 도루묵이 된 셈이다. 한은은 물가를 고려해 당분간 통화긴축 기조가 필요하다고 엄포를 놨지만, 시장에선 통하지 않았다. 기준금리가 올랐음에도 시중금리는 떨어지는 '기현상'을 목도한 때문이다. 한은조차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일찍 풀어버린 선물 보따리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집값은 다시 꿈틀대고 물가 오름세는 잡히지 않고 있다. 달러당 원화값은 1300원대까지 떨어지고 수입물가 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지는 추세다. 한미 간 금리 차이가 역대 최고치인 1.75%포인트(p)를 찍으면서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는 커지는 모습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도 적절치 못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바라는 투자자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면서, 금융기관에는 부실을 이연시킬 여지를 줬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부동산 금융 관련 위험성은 더욱 복잡해지고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융 부문 리스크와 취약성 등을 중시해야 하는 당국에는 상생 금융안이 선물이었겠지만, 소비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만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가계신용(빚)이 1년 반 이상의 긴축에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경우,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단기간의 대출금리 인하가 자칫 장기간의 고통을 초래하지 않도록 당국의 금리 개입이 옳은 것인지 생각할 때다.

sonhj1220@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존 데이비슨 록펠러 명언

"성공하려면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미국의 석유 사업가인 록펠러의 좌우명이다. 오하이오스탠더드석유회사를 설립한 그는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급속히 확대해 미국 내 정유소의 95%를 지배했다. 셔먼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지주회사 뉴저지스탠더드석유회사를 세운 그는 실질적으로 석유업계를 계속 지배하며 부를 키웠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떴다. 1839~1937.

☆ 고사성어 / 묵자비염(墨子悲染)

묵자가 물들이는 것을 슬퍼한다는 말. 출전 묵자(墨子) 소염(所染)편. 묵자가 실에 물들이는 사람을 보고 "파란 물감에 물들이면 파란색, 노란 물감에 물들이면 노란색이 되는구나. 이렇게 물감에 따라 실의 색깔도 변해 매번 다른 색깔을 만드니 물들이는 일은 참으로 조심해야 한다. 사람이나 나라도 이와 같아 물들이는 방법에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이다"라며 탄식한 데서 유래했다.

☆ 시사상식 / 플랫폼 비즈니스(platform business)

사업자(공급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기에 소비자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형태를 말한다.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기 제조업체들은 각종 소프트웨어 공급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 쇼핑몰도 일정한 지리적 공간에 다양한 상점들이 입점하게 유도해 소비자들이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논현로



구 자 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대법관 '7 대 6'으로 첨예한 대립
취업규칙, 근로자 불이익 변경에
사전동의 없어 무효판결 했지만
'집단적 동의권 남용' 판단 남아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의 관여 대법관이 7 대 6으로 날카롭게 대립한 끝에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우리나라의 엄격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해 예외적으로나마 유연성을 부여하던 판례 법리다. 기업이 취업규칙(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내부규정)을 변경할 때 단 1명이라도 불리해지는 근로자가 있다면 전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것이 우리 법원칙이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면 집단적 동의 없이도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기계적인 법리 적용으로는 도저히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지하는 대신, 노동조합 등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유효로 인정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문제될 만한 전형적인 사례였다는 생각이 든다. 사건은 2004년 주(週) 5일제 도입과 함께 시작됐다. 2004년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축소해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그 전에는 제한이 없던 연차휴가일수를 최대 25일로 제한했다. 개정 법률 부칙은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법률 개정사항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이 사건 피고 회사는 2004년께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만들면서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을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반영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회사는 최대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했다.

문제는 수년 후인 2009년께 대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제 대법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해당 취업규칙을 당장 적용받는 근로자집단뿐 아니라 장차 그 집단에 들어올 수 있는 근로자들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입장을 제시했다.

그리고 다시 수년 뒤인 2014년 일부 근로자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선고된 2심 판결은 앞선 2009년 판례를 적용해서 모든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보아, 이러한 동의 없이 제정된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결국 회사는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간부사원 89%의 동의도 얻었지만, 십수 년이 지나 모든 것이 무효라는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상고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법리 자체를 폐기해 버렸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근로자들이 승리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은 원래 2심에서 근로자들이 이겼던 사안인데 회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폐기하면서도 노동조합 등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등법원에서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직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이 사건에 이 법리를 적용할 때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국회, 법원, 고용노동부가 피고 노사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노동조합의 '동의권'에만 치중한다면 사건의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결이 외면될 위험이 있다.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법리가 정의와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다듬어지기를 바란다.

사설

'좀비기업' 퇴로 열어야 국가 경제가 산다

국내 상장기업 5곳 중 1곳은 한계기업이란 분석 자료가 어제 공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2347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7.5%가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3%에서 곱절 가까이 증가했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기업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좀비' 신세를 3년 이상 못 면하는 기업이 이렇게 많다.

좀비기업이 왜 늘었나. 코로나19 충격, 급격한 금리인상, 국내외 경기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타격을 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코스닥 한계기업은 2016년 9.3%에서 2022년 20.5%로 급증해 코스피 상장사(11.5%)를 크게 웃돌았다.

기업 환경이 어찌 변하느냐에 따라 좀비기업은 앞으로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국내 환경은 낙관을 불허한다. 주요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높이면서도 유독 한국에 대해선 낮추는 방향의 손질을 하고 있다. 국내 좀비기업이 급증할 공산이 크다는 방증이다.

주요 5개국(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에 중국과 한국을 더한 7개국의 한계기업 상황을 수평 비교하면 한국 처지가 최악인 것은 아니다. 2021년 기준으로 따지면 미국(20.9%)과 프랑스(19.2%)가 더 심각하다. 그러나 우리 국가 경제의 주름살이 더 깊게 파인다면 좀비기업 증가세는 확산될 테고, 이는 국가적 고통을 키울 수밖에 없다.

좀비기업의 난립은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경제·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건강한 일자리 생태계 구축도 방해한다. 좀비기업이 창궐하면 멀쩡한 기업마저 한계기업으로 밀려나기 쉽다. 창업의 물결도 시들해지게 마련이다. 한국은행은 2021년 한계기업 10곳 중 1~2곳(15.0%)만이 10년 후 정상기업으로 돌아왔다는 실증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좀비기업의 회생 가능성만 믿고 국가 여력을 총동원해 무작정 지원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 경제는 올해 1%대 초반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세수 펑크가 30조 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더 이상 재정 낭비를 일삼고 자원 배분을 엉망으로 꼬이게 해선 안 된다. 이웃 일본은 좀비기업 퇴출을 겁내다가 '잃어버린 30년'으로 직행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한계기업도 여러 종류가 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기업도 숱하다. 옥석을 가려 미래가 있는 기업은 지원하되 그렇지 못한 기업에는 퇴로를 열어야 한다. 구조조정의 시기를 잘 잡고 활용해야 국가 경제에 새살이 돋는 법이다.

CEO 칼럼

오피스가 생명공학 공간 되는 이유



최 민 성
델코리얼티그룹 회장

오피스가 생명공학 용도로 전환되는 트렌드가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생명공학 산업의 성장과 오피스 공간에 대한 수요 감소가 맞물리면서 촉진되고 있다. 생명공학 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의하면, 글로벌 생명공학 시장은 2022년 2710억 달러에서 2027년까지 4750억 달러로 연평균 11.8% 정도 성장이 전망된다. 이는 혁신적인 신약과 치료법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이에 부응하려는 기업과 정부의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지원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료 수익·빠른 공급전환 장점

반면 미국에서 오피스 공간 수요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다.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더 많이 선택함에 따라 기업의 오피스 공간 수요는 줄고,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 오피스 시장은 도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 중에서 생명공학을 위주로 기존 오피스를 용도 전환하고 있다.

오피스를 생명공학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미국에서 개발자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2021년 1분기에 생명공학 공간확보 프로젝트 전체 중에서 오피스 전환으로 확보한 공간 비율은 41.5%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작년 4분기에는 31%를 차지했다(CBRE). 오피스를 생명공학 공간으로 전환하는 일은 복잡한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 생명공학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건물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개발자는 해당 지역의 생명공학과 시장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생명공학 공간으로 전환하는 일은 개발자에게 보람 있는 옵션이 되고 있다.

오피스를 생명공학 공간으로 전환할 경우의 이점을 보자. 우선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생명공학 공간은 일반적으로 오피스 공간보다 임대료가 높다. 이는 생명과학 기업이 실험실과 연구 시설에 대한 높은 수준의 특수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빠른 공급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 오래된 오피스를 생명공학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기에, 새로 짓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최소 50%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대부분의 오피스 빌딩은 이미 천장 높이가 높고 기존 건물 외벽이 있다. 전기 및 기타 유틸리티는 일반적으로 더 강력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지만 이미 건물이 있다는 사실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오피스를 재사용하므로, 건축 자재를 매립하지 않아 폐기물과 탄소를 줄일 수 있으며, 개발자가 새로운 건물을 짓고 건설로 인한 환경 영향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CBRE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작년에 28만 평 이상의 오피스가 생명공학 공간으로 전환됐다. 주로 뉴욕시,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과 같은 대도시에서 이뤄지고 있다. 뉴욕 맨해튼 중심가(8th Avenue)의 한 건물은 42층으로 2017년에 생명공학 공간으로 전환됐다. 보스턴의 원보스턴플레이스(One Boston Place)도 생명공학 공간으로 전환된 유명한 사례다. 이 12층 빌딩은 원래 보험회사의 본사로 지어졌지만 최근 생명과학 기업에 임대됐다.

새로 짓기보다 기존 건물 활용을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125개의 오피스 전환 프로젝트 중 절반이 생명공학 용도로 전환되고 있다. 대부분 사례는 시장수요 규모와 지하철의 밀집도에 따라 크게 달라져, 생명과학 관련 파이프라인의 77%를 책임지고 있는 뉴욕시가 이러한 전환 프로젝트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의료 혁신과 코로나19로 촉발된 제약 개발의 활성화로 인해,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자금이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생명공학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33~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Hines 백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새롭게 생명공학 공간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어있는 오피스, 상가, 부동산 등을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노무, 톡!

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회사 임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회사에 대한 책임을 대표이사가 어느 수준까지 지는 것인지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의 '양벌규정'이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한 사람 외에도 관련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 형벌을 과할 것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할지라도 회사의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위법행위와 관련해 대표이사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의 책임이 대표자에게 있지 않다.

최근 판례(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도3005판결)에서도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대표이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생각건대 이와 같은 법리적 구분을 이해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며 현행법상 사실상 대표이사가 직접 범죄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한 직접 처벌대상은 법인회사와 사실상 대표자의 포괄적 지시를 받고 관여한 실무자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형사처벌된 실무자의 공석은 다른 노동인력으로 대체되고 기업이 부담하는 벌금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방식으로 형벌의 효과는 미미해진다.

이를 고려하면 필수적 준수가 필요한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하여는 직접적 행위자뿐 아니라 대표자 또는 임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일부 개선해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실질적인 법 위반에 대한 제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오수영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노무사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덕헌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만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세상을 바꾸는
K-Bee 프로젝트

피겨 스타들의 달콤한 만남

피겨 스타 차준환 선수와 이해인 선수가
서울숲 속 K-Bee 도시양봉장에서
달콤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꿀벌의 소중함을 배우고
직접 양봉 체험을 하며 희망을 더한 두 선수
함께한 노력이 희망의 결실이 되도록

KB금융그룹은 앞으로도
꿀벌의 생태계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To BEE continued

Korea Better
KB금융그룹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준환

K-Bee 프로젝트
KB금융그룹은 밀원숲 조성 및 도시 양봉을 통해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K-Be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ee 도시양봉장 2호 '서울숲'
여의도 KB국민은행 본관 옥상 양봉장에 이어
약 12만 마리 규모의 두 번째 도시양봉장을
서울숲에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KB 금융그룹